

2022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 학술회의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부정의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역사부정론의 지식 생산과 그 대응 모색

| 목 차 |

[1부]

- 어긋난 쟁점 설정: 한국인 ‘위안부’ 피해부정의 초점 9
- 박정애(재단)
- 젠더 관점에서 본 일본의 일본군‘위안부’문제 인식 25
- 후루하시 아야(이와테대)

[2부]

- 램지어 답변에서 드러난 역사부정주의의 조직화와 ‘램지어 구하기’의 실체 41
- 강성현(성공회대)
- 역사부정의 공공외교: 유럽 내 일본 극우재단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57
- 윤석준(성공회대)

| 학술회의 일정 |

| 시 간 | 내 용 |
|-------------|--|
| 14:00~14:10 | 개회 및 인사말 : 남상구(연구정책실장) |
| 1부 | 한국인 일본군'위안부'피해 부정의 고리들 사회: 서종진(한일역사문제연구소 소장) |
| | 14:10~14:35 어긋난 쟁점 설정: 한국인 '위안부' 피해부정의 초점 - 박정애(재단) |
| | 14:35~15:00 젠더 관점에서 본 일본의 일본군'위안부'문제 인식 - 후루하시 아야(이와테대) |
| | 15:00 ~15:50 토론: 서현주(재단) 김은경(한성대) 김영숙(재단) |
| 15:50~16:00 | 휴 식 |
| 2부 | 역사부정론의 네트워크, 그 유통과 수용 사회: 김득중(국사편찬위원회) |
| | 16:00~16:25 램지어 답변에서 드러난 역사부정주의의 조직화와 '램지어 구하기'의 실제 - 강성현(성공회대) |
| | 16:25~16:50 역사부정의 공공외교: 유럽 내 일본 극우재단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 윤석준(성공회대) |
| | 16:50~17:40 토론: 양지혜(재단) 이현미(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석주희(재단) |

**어긋난 쟁점 설정:
한국인 '위안부' 피해부정의 초점**

박정애(재단)

어긋난 쟁점 설정: 한국인 '위안부' 피해부정의 초점

박정애(동북아역사재단)

1. 들어가며

○ 자주 잊고 있는 사실이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는 시기, 지역, 그 지역의 정치적 성격에 따라 양상이 각각 다름. '위안부'의 출신지 또한 일본, 조선, 만주, 다렌, 각 점령지 등 각각 다르며, 이 여성들이 속한 에스닉 또한 일본인, 조선인, 중국인, 현지 토착 민족 등 각각 다름.

→ 일본군 '위안부'의 동원, 이송, 배치는 각각의 사정에 따른 범주가 얽혀 이루어짐.

→ 전쟁 당시 일본군의 성동원은 일본과 식민권력, 현지권력 등 각 권력의 기획과 실천, 협조와 방임, 묵인과 은폐가 이루어지는 데 이루어진 측면이 강하며 이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조직적, 체계적인 전시 성폭력 시스템'으로 명명되고 있는 것임.

(주로 통첩과 명령, 협조 공문 등을 통해 시스템이 형성되었으며, 전쟁 시기와 지역 전체를 아우르거나, 제도 시행의 중심 기준이 되는 일본군 위안부 법령이나 정책이 없었음)

- 위안소 개설과 운용, '위안부' 동원 등에 일본군과 외무성, 내무성, 조선총독부, 대만총독부, 중국의 친일 괴뢰정부 등이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지는 그간 발굴, 수집, 정리된 자료들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고 있음.(고노담화 때 확인했듯이)
- 하타 이쿠히코가 이미 지적했듯이 전쟁 시기 초법적인 권력을 행사한 일본 군부의 존재와
 - 이미 만주사변 이후부터 외무성의 실권은 점차 하락하여 '육군성 외무국'이라는 조롱을 듣기도 했다. 1938년 12월 내각 동아원, 1942년 11월 대동아성을 신설하면서 외무성의 기능은 눈에 띄게 축소되었다. 秦郁彦, <<戰前期日本官僚制の制度・組織・人事>>, 戦前期官僚制研究会, 1981, 675-676; 684; 710-711쪽-
 - 전시 총동원체제를 수행해 나갔던 일제 공권력의 성격을 생각할 때,
 - 당대 합법/불법/무법 방식의 여성 모집, 정치적 경계를 넘는 여성의 이동, 일본군의 치안을 우선시 하는 전시 지역에 개설된 위안소에 이루어진 여성 배치 등은 모두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권력의 기획과 통제 하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전쟁 시기 피지배 민간인의 자발성 운운이 정치외교적 쟁점식이나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의문시 하고 그 맥락을 따져야 한다.

- 거칠게 분류하여 일본인, 조선인/대만인, 점령지인으로 나뉘볼 수 있는 피해자 구성에서 그 피해 유무에 대해 관심이 과잉된 이는 조선인 피해자이다. 일본군'위안부' 제도 하에서 조선인 여성이 모집, 이송, 배치된 사실은 이미 공문서 등에서 드러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논의 수준은 피해구조에 대한 이해(시공간을 가로지른 사회구조와 연루되어 있는)보다는 피해 자체를 드러내거나 부정하는데 머물러 있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조직적, 체계적 특징을 생각할 때,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역사적 특성은 일본인이나 식민지 여성에 대한 실태 규명에서 더 잘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피해자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피해에 대한 인정투쟁'에 머물러 있고, 조선인 피해자에 대한 논의는 피해 자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일부 사례에 치우쳐 있거나, 그 피해가 전면 부정되고 있다.
- '위안부'의 모집, 이동, 배치, 위안소 생활, 종전, 귀환/미귀환, 그 후 일상에 연루되어 있는 지역, 기관, 관계들에 대한 실태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피해를 부정하기 위한 프레임은 재빨리 완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 (심지어 진상규명은 어느 정도 되었으니 그 다음 한일관계를 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최근 발언도 있다. 각각의 피해실태를 공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치외교적 '화해'를 도모할 때, 그것이 피해 재발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각국의 내셔널리즘에 수렴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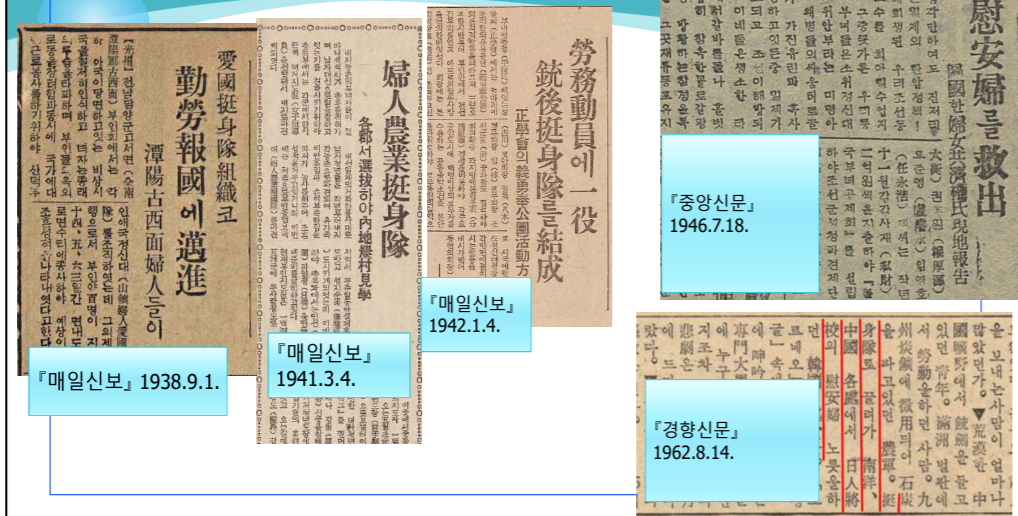
2. 어긋난 쟁점: 한국인 '위안부' 피해부정의 초점

- 일본으로부터 발신되기 시작했던 이른바 '위안부 망언'은 주로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착종되어 있다. 피해자로부터 '위안부' 경험을 침묵시켜왔던 '수치심'을 자극하여 다시 침묵을 강제하는 효과를 의도하고 있으며, 미디어는 이 '망언'의 내용을 반복해서 보도해왔다. 더불어 '성적 피해의 피해자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미디어나 사회가 대응해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공론장에서 드러나는 피해자의 증언은 대중이 '그 피해를 안다고/ 또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도 했다. (김주희, <<무엇을 더 숨길 게 있나>>: '위안부' 망언의 본질주의를 넘어>, <<여성과 역사>> 34, 2021)
- 생존자가 피해자로서 자신을 아이덴티티화하는 과정은 현재까지 지속되어온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돌파하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위안부'피해에 대한 부정 프레임은 여전히 주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인종차별과 성차별에 기대 손쉽게 형성될 수 있었다.
- 이는 1990년대 하타 이쿠히코의 발언과 저서에 의해 원형이 완성되어 2014년 아사히 기사 검증으로 한국인'위안부'피해부정의 확정편향을 사회적으로 공식화할 수 있었다.

III '요시다 세이지의 거짓말'

- 1977년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 1983년 <<나의 전쟁범죄>>. → 1980년대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
- 부정론자 주장: '그 악영향으로 위안부 강제연행론이 국제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 폭력과 납치에 의한 위안부 모집은 주로 인도네시아 등 사례가 반영.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이해하는데 요시다 세이지 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없다.
- [윤정옥 회고] 1992년 6월 16일 "요시다 세이지씨를 만났다... 그가 나를 만나고자 한 이유는 공식적 사회의식을 가졌으면 해서였다...그가 바라고 있는 사회의 장면은 연극적인 느낌이 있었다." 1993년 6월 19일 "제민일보 허기자는 요시다의 책을 픽션으로 못박았다."
- 위안소 설치, 관리, '위안부' 이송에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표명한 고노담화(현재까지 일본정부의 공식 입장)에는 요시다 세이지 주장이 반영되지 않음.

[2] '정신대와 위안부의 혼동'



- 2014년 8월 5일『아사히신문』은 정신대와 위안부를 혼동한 기사는 오보였다고 발표. → 발표 이후 일본에서 식민지 조선의 정신대와 위안부는 서로 다른 것으로 기정사실화. 이를 배경으로 역사부정주의자들의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 또한 거세지고 있다. 용어와 실체를 혼동하는 나라에서 '위안부' 피해를 제대로 인식할 리 없다는 불신이 있기 때문.
- 현재 한국에서도 여전히 두 개념은 서로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혼동'되고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 → 정쟁의 장에서는 토론했고 있지 않음.
- 무엇보다 식민지기를 기억하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어째서 정신대를 위안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음.
- 일본의 여성정책은 남편을 내조하고 아들을 길러내어 간접적으로 국가의 발전에 공헌하는 양치현모주의 정책이었고, 이러한 기초 하에 가족제도, 교육제도를 시행. 양치현모주의 정책은 총동원체제 구축 이후 '군국의 어머니', '총후 여성'이 되어 전쟁의 후방을 지키는 여성의 역할을 규정하는 정책으로 변화하였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방향으로 총동원체제기 남성의 노동 공백을 메우기 위한 여성 노동력 동원 정책을 시행했다. 1943년 이후 등장한 여자(근로)정신대는 이전의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 정신대와 '혼동'되지 않은 채 여성노동력 동원조직을 가리켰다.

- 반면 식민지 조선에서도 양치현모주의 여성정책이 시행되었으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중산층 여성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조선여성들은 제도교육에서 배제된 채 관습적 가부장제와 결합한 식민지 가부장제와 빈곤한 가계의 지배하에 있었고, 공권력의 성매매 관리 하에서 형성된 여성 인신매매 매커니즘의 희생이 되었다.
- 공권력과 사회 권력들이 식민지 조선에서 행한 여성 차별들은 '민도(民度)'라는 명분의 민족 차별과 연관되어 있었다. 1938년 4월 이후 총동원체제가 시작되면서 식민지 여성들은 비로소 공권력의 적극적인 동원정책의 대상이 되었다. 총동원체제와 더불어 일상으로 파고든 정신대라는 동원용어와 더불어 '미혼여성' 또는 '처녀'를 대상으로 한 노동력 동원이 시행되었으며, 같은 시기 전쟁의 확대와 더불어 늘어난 '위안부' 동원에 매진하는 모집업자들이 있었다. 근로보국대, 애국봉사대, 여자추진대 등 각종 동원조직들이 정신대라고 범칭 되었으며 애국반, 이장구장 등 동원조직의 협조를 얻어 마을의 비혼 여성에게 접근한 '위안부' 모집업자들은 '군수공장의 여공', '중군간호부', 또는 정신대를 내세워 감언이설이 섞인 전선 동원을 강요하였다.
- 1938년 이후부터 식민지민들에게 '여성이 정신대로 간다'는 것은 '전쟁터에 끌려가서 여성으로서 고초를 겪는 일'을 의미했고, 1943년 이후 여자(근로)정신대 동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에 들어와서는 '미혼여자는 여자(근로)정신대가 된다'는 공권력의 방침에 커다란 공포를 느꼈다.

- 전쟁이 끝나고 '위안부' 피해자의 처참한 현실이 한반도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전후 한국 사회에는 '정신대로 끌려가 위안부가 되었다'는 전선 여성 피해 서사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총동원체제 이후부터 중전을 거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1990년대까지 한국 사회에는 정신대와 '위안부' 개념은 착종되어 모두 일본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를 의미하는 용어로 이해되어 왔다. 이 때문에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로 오해되어 또 다른 차원의 불이익과 고통을 겪어야 했던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이처럼 정신대와 위안부 개념의 착종 문제는 포스트 식민주의의 문제이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제도라는 아시아·태평양 전쟁기 공권력에 의한 성착취 시스템에 내재된 민족과 성, 계급 차별의 문제를 찬찬히 따져보아야 정신대/위안부 착종 상황이 드러내는 식민지적 특성을 해명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제국주의 일본의 전쟁책임과 더불어 식민지 지배책임도 따져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뜻한다. 조선인 '위안부'가 동원되던 시기의 식민지 및 젠더 구조가 분명해져야 조선인 '위안부' 동원에 관한 실태와 그 성격이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각 시기별, 지역별 피해실태를 드러내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가 될 것이다. (박정애, <총동원체제기 식민지 조선에서 정신대와 위안부 개념의 착종 연구: 정신대의 역사적 개념 변천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59(2).)

[3] '신뢰할 수 없는 피해자 증언'

- 피해자 구술을 무기 삼아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연구의 시작은 일본의 극우 역사학자인 하타 이쿠히코의 글과 책이다. 그는 성매매, 공창제는 근대국가 어디에나 있었으며, 전 세계 전쟁터나 군대 주변에는 '위안부' 같은 존재가 있기 마련이었다고 주장하는 책 『慰安婦と戦場の性』(新潮選書, 1999) 제6장에서 <위안부들의 신상이야기(身の上話)>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들의 구술을 '검증'했다.
 - 6장에서 하타는 예로부터 '조로(女郎: 성매매 여성)의 신상이야기'라는 말이 있어왔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젊은이들이 듣는 모든 것을 믿어버리는 것에 대해 연상자들이 후회할 때 재미있어하며 인용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이 문장에는 위안부여성을 포함한 성매매 여성들이 하는 말을 모두 믿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 이어서 '위안부'들의 이야기를 뒷받침할만한 문서자료가 없다고 지적한다. 패전한 일본이 전범재판의 자료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문서자료를 태웠고, 군인도 군속 신문도 아니었던 위안부들은 공적 기록이 없을 수밖에 없으며, 이름이 아닌 가명(假名)이라 표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동료들의 교차검증도 어렵다고 한다.
- ➔ '위안부' 관련 문서자료가 제약이 많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셈이지만, 문서자료나 교차구술에 의한 '검증'의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 하타는 위안부 구술타입에서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타입이 보인다고 지적.
 - (1) 위안부 생활이 평균보다 가혹한 것 같다.
 - (2) 전후 생활과정에서 혜택 받은 것이 없다.
 - (3) 이름을 내는 것을 싫어하는 가족을 가지고 있지 않다.
 - (4) 지력(知力)이 낮고, 부추김에 넘어가기 쉽다.

- 무엇보다 (4)의 지적에서 위안부나 성매매 여성에 대한 하타의 혐오관을 볼 수 있다. 본인은 위안부 구술을 검증하고자 하지만, 자신의 지력이나 관점은 검증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 또한 하타는 "얼핏 보아 마이너스라고 생각되는 조건은 오히려 소박한 관중의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다. 생년이나 위안소의 장소조차 기억하고 있지 않아도 초등학교조차 받지 않은 비참한 경우 탓이 된다."(178쪽)고 언급한다. '마이너스' 구술의 맥락을 '관중의 동정을 받기 위해'라고 함.
- 그러나 언어화하기 어려운 자신의 경험을 '피해'라는 범주 안에서 청자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나온 패턴이라고 생각해야 할. 이것이 무제라면 식민지 시기 여성의 삶이나 전시 성폭력 피해를 상상하지 못하고 전후에도 피해를 말하지 못하게 했으며, '피해자다움'의 범주 안에서만 여성의 삶이나 피해를 판단하려고 하는 사회인식의 한계 때문일 것이다.
- 뒤쪽의 지적은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생년을 되새길 일이 없었던 여성들이 삶에 대한 몰이해, 그리고 실제 생년과 호적 생년이 다른 경우가 많은 당대의 정황이나 한국식의 세는 나이와 일본식의 만 나이가 섞여 사용되기도 하는(만 나이 기준으로 나이를 말하는 피해자의 경우도 꽤 많다) 사실에 대한 하타의 무지를 보여주는 것. 위안소 장소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피해 사례도 다수임. 제한된 정보 안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야 하는 위안부 입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임.

- 이처럼 정신대와 위안부 개념의 착종 문제는 포스트 식민주의 문제이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하다' 이쿠히코의 '위안부' 구술 인용방식

- 1) 구술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
- 2) '위안부'의 구술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다. 특히 일본관헌에 의해 위안부가 강제연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 "(대부분 몸팔기'라는 제목으로 한국인 피해자 구술의 일관성 없음을 지적한 후) 조선 반도에서 일본의 관헌에 의한 위안부의 강제연행적 조항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192쪽)
 - "현재의 법상으로는 시효 문제를 뺀다 해도 일본국이 금전적 보상의무를 지는 것은 옛 위안부들이 "관헌의 조직적 강제연행"에 의해 모집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377쪽)"
 - "위안부들의 이야기는 보상을 의식했는가, 정확하지 않은 것이 많다. 특히 일에 들어간 동기에 대해서는 관헌에 의한 조직적인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382쪽)
- 3) 부모가 팔거나 브로커에게 속아 '위안부'가 된 것을 강제연행이 아니다.
- 4) 병사와 연애를 하기도 했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기도 했다. ➔ 성노예가 아니다.
- 5) 고수익을 올렸고 빚을 일찍 갚은 뒤 그만두고 돌아올 수 있었다. ➔ 성노예가 아니다.

- '위안부' 피해부정을 주장하기 위한 이러한 방식은, 일본 우익세력에게도, 일본과 한국, 그리고 램지어까지 이어지는 역사부정론자들에게도 하나의 전범(典範)이 되었다.

➔ 이영훈 외, 『반일종족주의』, 미래사, 2019.

"강제연행설을 뒷받침해온 또 하나의 근거가 있으니 원 위안부들의 증언입니다. 일반적으로 역사학자들은 다른 자료를 통해 방증되지 않은 개인의 증언을 사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 위안부들의 증언에도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어느 여인은 철도 역전에서 일본군에게 잡혀 중국으로 끌려갔는데, 기차 안에는 많은 여인과 군인들이 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맨 처음 행한 증언은 그와 달랐습니다. 그녀는 양아버지가 자신을 팔았으며, 이에 일본군보다 양아버지를 더 미워한다고 했습니다"(306-307쪽)

-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이유는, 공동체의 집단지성이 공동체 구성원의 인권이나 공존을 해치려는 시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장의 방향성을 가늠하면서 그 내용구성의 정당성을 판단하면서 공론장에 올릴 수 있다는 인간의 자정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 하타에서 램지어에 이르기까지, 근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구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부정론자들은 피해자의 구술을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일본군 '위안부'제도의 역사 자체를 지워버리려 한다. 이때 이들이 부정하는 역사는 1990년대 이후 '위안부'와 같은 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 트라우마를 치유하려는 방향으로 쓰여진 역사이다.

→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부정론자들의 구술 공격에 일일이 대응하며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입증'하지 않고, 역사와 여성, 국가와 시민,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관점을 문제삼는다.

*우리가 위안부 문제인식과 해결에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부정론자들이 고집스럽게 질문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여성이 불특정 다수 남성의 (인간이 아닌) 성적 대상이 되고 그것이 전적 거래를 암시하는 '매매'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고, 근대국가가 이를 합법화하여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사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면해야 한다. 위안소를 이용하는 군인들이 사용했다는 '빠'라는 속칭에서 볼 수 있듯이 위안소에서 군인들은 여성을 인간이 아니라 오로지 (남성들을 위한) 성기'만으로 취급했다. 이러한 여성의 도구화를 전쟁수행(국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스템화했던 근대 공권력의 과거와 그로 인해 현재까지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의 삶에 우리는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인가.

- 부정론자들은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에 기초한 폭력으로 점철된 20세기를 구성하거나 벗어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이 새로운 인식을 탐구해온 역사 분석이나 이론의 축적이나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공부해보려는 지적 성실함이 전혀 없는 채로 그들의 '여성(혐오)관'을 '학술'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쓰고 있다.
- 지적 계층을 성찰하지 않고서도 책을 내고 논문을 쓸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들이 학계에서, 정치사회 영역에서 권력이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그 때문에 이들은 그들 스스로 요구하는 엄격한 수준의 근거를 제시하고 맥락을 설명하지 않고서도 역사를 부정할 수 있다).
- 우리사회가 그러한 현실 권력과 반지성주의에서 지금 자유로운 상태인지, 표현의 자유라는 대원칙 하에서 상식과 윤리를 공유하면서 진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 구술 인용의 절취와 왜곡 문제는 부정론자들 뿐 아니라 구술을 함께 인용하며 역사들을 구성하는 누구나 맞닥뜨리는 딜레마이다. 따라서 생애사의 맥락 안에서 구술 인용의 절취와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생명을 파괴하거나 사회적 악자를 이용하지 않기 위한 대안적 '위안부'역사쓰기를 지속해야 한다. 노골적으로 절취하고 왜곡하는 역사부정론자들의 피해자 구술 인용에 대항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 김수진은 "증언은 역사와 기억의 관계가 구성되는 방식에 개입함으로써 역사를 다시 쓰는 시도"이며, '위안부'역사쓰기의 과제는 "역사적 트라우마의 극복과 대안적 역사쓰기"라고 했다. 그러나 개인적 집합적 트라우마를 가진 경험의 집적물로서 군위안부 사건은 이 트라우마적 역사를 잊고자 하는 망각 욕망을 가졌기 때문에 집합적 기억과 말화가 억압되어 왔다. 따라서 위안부 사건을 공적 기억의 장으로 소환하고 여기에 연루된 다양한 주체들의 경험을 드러내는 일은 원천적으로 '증언의 불가능성' 문제를 안게 된다. 그럼에도 이 역사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대안적 역사쓰기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은 '공감적 정중'이 형성되어 있다면 이 아프리카를 넘어서는 것도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김수진, 「트라우마의 재현과 구술사: 군위안부 증언의 아프리카」, 『여성학논집』30(1), 2013)
- 시기나 지역, 정치적 상황에 따라 피해실태가 달랐던 일본군 '위안부'제도의 역사상은 아직도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진상규명은 책임자, 연구자, 대중 등 '정치'의 몫이다. '위안부' 연구자들은 실증자료로서가 아니라 자기 연구의 단서를 찾거나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유지해온 피해여성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구술자료를 읽는다.
-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병사와 위안부와 같이 대등한 관계가 아닌 관계를 인가적인 교류라고 말할 수 없다. 식민주의나 인종주의, 성별주의에 기초해 사회구성원을 서로 자율적으로 협상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고, 생존을 위한 그들의 막다른 선택을 '자발적'이라는 레토릭으로 포장하지 않는다. 인간은 낮은 행복보다 익숙한 불행을 선택한다는 말이 있다. 익숙한 불행을 선택하는 삶이 중립된 생애는 결코 우리가 바라는 미래가 아니다.

3. 젠더와 탈식민주의 관점으로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재구성하기

- "식민주의는 비서구지역과 그 인민의 자주권, 전통, 재산권을 부정하고 박탈하고 그들을 주변화하거나 타자화하며 서구의 경제적,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 지배와 우월성을 관철시켰다. 이러한 식민주의는 식민체제가 종식된 이후에도 식민지 인민들의 자주성 회복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재승, <식민주의와 과거극복의 정치> <<법과사회>> 2015)
- 식민권력은 조선의 민도가 낮고 식민지라는 조선의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내지(일본)와 구분해서 법을 적용하고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함 → 식민권력의 재량권이 넓었음
- '위안부'피해부정론자들은 성차별, 인종차별 의식에 기대고 있고 국제법상의 성노예 개념이나 식민주의가 작동된 식민지 조선의 역사에 대한 학술적 이해가 없다.
- 요시미 재판 때 출석한 하타 이쿠히코는 국제법상 '위안부'가 노예가 되기 위해서는 일본군의 소유물이 되어 재산등록이나 명부가 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라고 부를 수 없다고 했다. → 그러나 국제법에서 노예조약 제1조는 "노예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 소유권이 수반되는 어느 하나 또는 모든 권한이 행사되는 개인의 지위 또는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성노예를 논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수반하는 권한의 행사, 그리고 자유와 자율권이 손상받는 개인의 지위 또는 상태'를 논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하타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 또한 하타는 '위안부'의 외출이나 폐업은 군의 허가를 받거나 빚을 다 갚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인정했다. → 그럼에도 군의 허가 하에 외출이나 폐업을 한 사례를 놓고 "외출이나 폐업의 자유가 있었다"고 모순된 주장을 편다. (濱辺春巳, 「秦郁彦証言とその非学問性」, 『商学論集(中央大学)』 58(5・6), 2017.3.)

○ 하타는 '위안부'가 전쟁 시기의 공창(公娼)이었고, 전시체제가 이후 공창제가 변모하면서 '위안부' 공창의 처우가 좋아졌다고 했다. 전쟁 이전에는 업주의 착취, 경찰의 비협조로 여성의 처지가 악화했지만 중일전쟁 이후 군대용 '위안부'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일본정부와 군이 업자 선정과 여성매매 단속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했다는 것. 반면 전쟁 이전 일본의 공창제 하에서는 창기가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지적.

전차금이 남아있어도 폐업(廢業)하는 자유는 인정되었지만 업주 측의 방해와 경찰의 비협조로 실제로 폐업하기도 어려웠고 새로운 생업을 갖는 것도 쉽지 않았다. (秦郁彦, 『慰安婦と戦場の性』, 新潮社, 1999, 28쪽)

○ 공창제가 노예제도라는 당대 일본 안팎의 비판에 대해 일본정부는 '자유폐업' 제도를 내세워 대응했다. 전차금이 남아있어도 창기가 원할 때 언제든 그만둘 수 있으므로 공창제는 노예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이 창기를 그만두더라도 남은 빚은 갚아야 했고, 하타 이쿠히코가 지적한 바와 같이 업주와 경찰의 부당한 태도로 인해 창기가 실제로 폐업하기는 어려웠다.

○ 한편 램지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기 위해 일본 공창제의 합법성과 한국인 위안부의 피해 부정에 집중했다. 램지어는 전쟁 전 일본 사회의 창기 계약이 업주와 창기의 이익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전쟁터의 한국인 위안부 계약과 동일했다고 주장했다. 하타 이쿠히코가 주목했던 공창제나 일본군 '위안부' 제도 관리자로서의 일본정부와 일본군의 역할도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램지어를 지지하는 하타 이쿠히코는 그와 다른 주장에 대해 어떠한 학술적 논쟁도 하지 않았다. → 부정론의 비학문적 구성 (박정애, 『경찰 자료로 보는 램지어의 '태평양 전쟁의 성계약' 비판』, 동북아역사리포트, 2021.5.1)

→ 또한 일본의 성매매 관리와 인신매매 단속 문제를 기준으로 식민지와 전쟁터의 성관리와 인신매매 문제 설명

○ 위안부는 당시의 합법적인 공창제도 가운데 민간 '업자'에 의해 모인 것이고 자유로운 계약에 기초해서 상행위를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의가 일부 보이지만(이영훈, 『반일종족주의』 등), 그것은 적어도 조선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내지의 공창제도 하에서도 창기 등이 되는 여성들이 자유의사로 매춘을 하여 돈을 버는 것을 선택했는지는 의문이고, 그 점을 논하지 않아도 애초에 조선에서 행정당국이 여성의 인신매매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체제 자체가 충분하게 정비되지 않았던 것이다.

○ 일본제국이 적지 않은 조선인 여성을 위안부로 했다는 것을 문제삼는 논자도(물론 그것은 극히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그렇지 않고 그녀들은 자유의사로 상행위를 했다고 하는 논자도(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은 통상의 감각이 있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모두 일본제국이 조선에 들어온 공창제가 사회에 정착해 그 안에서 행정당국이 관리, 파악하는 주선업이 발달한 것으로 생각, 그렇지만 식민지 조선의 실정은 그렇지 않았다. 행정당국이 사회의 구석에서 행한 매춘과 여성의 인신매매를 충분히 파악하고 관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식민지기의 조선을 일본내지와 나란히 근대적 사회였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류. 위안부의 요원확보에 대해 논의할 때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 조선의 행정당국이 직접, 또 계획적으로 위안부의 요원확보를 했던 것은 아니라는 본고에 견해에 대해서 일본제국을 면죄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진 자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본고에서 분명하게 한 것은 위안부의 요원확보를 둘러싼 일본제국의 책임을 더욱 精微하게 파악하는 전제가 되는 것이다. 식민지 지배하의 조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매춘시설에 젊은 여성이 팔리는 것과 같은 상태를 낳았다. 그 뿐만 아니라 매춘시설의 경영이나 여기에 여성을 소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또는 이에 대해 합법의 틀을 설정해서 경찰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세우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없었다. 그 가운데 대량의 여성을 위안부로서 모으기 위한 범죄행위가 횡행하고 그 단속도 철저하지 않았다. 그 모두 일본 제국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 더욱이 조선의 경찰당국이나 헌병은 여성들이 속아 위안부로 가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위법행위를 묵인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또한 일본제국의 용해군의 주요한 지위에 있던 자도 그러한 조선의 위안부 요원확보의 실정을 알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 물론 이를 전제로 해서 조선에서 많은 위안부를 계속 모은 것도 추측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일본 제국의 책임은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外村大, 『娼妓等周旋業と慰安婦の要員確保:日本内地と朝鮮との比較』, 『龍谷大学経営学論集』 61(2), 2022.)

○ "창기 등 주선업의 업무 내용이나 경영의 실정에 대해서.... 선행연구에서는 유교나 허위를 전하는 매춘시설에 여성을 팔아버리는 악랄한 행위만 이야기해왔다. 그러나 창기 등 주선업은 당시의 합법의 범위 내에서 매춘시설 경영자에게 창기 등의 소개를 행했다. 여기에서는 소개할만한 여성이 문제없이 일을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고 그 부모 사이에서 전차금의 설정의 교섭을 정리하기 위해 경험으로 익힌 지식이나 판단력이 요구되었다. 소개한 여성이 매춘시설에서 계속일해야 했고, 본인과 그 부모의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다.

○ 일본 내지에서는 그러한 합법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창기 등 주선업자가 많았다. 그들에 대해서는 경찰 당국의 측은 감시하고, 위법행위가 있으면 처벌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에 대해서 조선에서는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창기 등 주선업자의 수가 적었다. 이 점이 일본내지와 조선의 위안부 구입수요에 대한 대응 차이이다. 일본 내지에서는 창기 등 주선업자를 사용해서 이미 매춘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로부터 위안부가 될만한 자를 선택할 수 있었다. 합법의 업자로서 계속한 그들의 활동을 경찰당국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통제하는 것도 가능했다. 그렇지만 조선에서는 매춘 미경험의 여성을 무허가 업자에 의존하면서 모을 방법이 없었다. 그들의 활동은 경찰당국이 충분히 감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 가운데 속은 여성을 위안소에 보내는 등 악랄한 범죄가 횡행했던 것이다.

○ 위안부를 어떻게 모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업자'는 실행부대였다고 간주되고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군에 의한 수족으로 움직였던 존재였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위안부를 모은 '업자'라는 것이 창기 등 주선업자인지, 무허가업자인지, 또는 더 나아가 하청업자였는지 주의해야 한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에서는 많은 경우, 그것은 무허가 업자나 그 하청업자였다. 그리고 그들은 의뢰자인 일본군으로부터, 유괴하라 라든가 속여서 끌고 오라는 말을 들을 것도 없이, 그것을 행하는 조건이 있는 가운데 자주 그러한 수단을 취했을 것이다. 결국 조선에서는 위안부를 모을 때 일어난 범죄는, 그 담당자인 관청이 콘트롤하는 조건이 없고, 다시 말하면, 수족과 같이 사용된 위에 일어났다고 간주할만 하다.

(박정애, <식민지 조선의 '수양녀' 문제와 인신매매>, <<역사연구>> 44, 2022)

○ "식민지 조선 출신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에는 수양딸의 형식으로 남의 집살이를 했다가 기생권변에 있다가 끌려갔다는 구술을 한 경우가 적지 않다. 김군자는 조선의 중경의 수양딸로 있다가 1942년 수양부의 명령으로 만주에 보내졌다고 했고, 이용녀는 부친에게 '300원'을 주고 자신을 수양딸로 삼은 수양주인이 1942년 일본에 가서 빚을 갚으라고 하여 시키는 대로 했는데 도착한 곳이 머머의 위안소였다고 했다. 조윤숙과 홍애진, 김학순 등은 권변의 수양딸로 있다가 만주나 중국으로 가서 '위안부'가 되었다.

○ 이 가운데 최초의 공개증언으로 이름이 높은 김학순은 '기생학교의 양아버지'와 중국에 갔다가 '위안부'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역사수정주의자들에게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당시 일본에서도 몸이 팔리는 딸은 매춘업자의 양녀 형식을 띤 사례가 많기 때문에 김학순의 경우도 전형적인 '몸 팔기(身売り, 미우리)' 경우였고, 중국에서 '위안부'가 된 것도 양부에 의한 '되팔이(轉賣)'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책임을 지고 사죄할 부분은 없다는 것이다.

○ 피해자들이 '수양딸'에서 '위안부'로 이어지는 자신의 삶을 '본인의 의사에 반한 피해'로 인식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매춘업자의 양딸'은 '몸을 파는 매춘부'이기 때문에 당대 정부가 책임질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식민지 시기 일본과 조선에서 존재했던 '양딸'의 성격이 동일하고 당사자의 동의 하에 '매춘부'가 되었을 것이라고 상정되고 있다. 이렇게 역사수정주의자들은 피해자의 기억을 '교정'하여 현재의 역사인식을 자신의 방식으로 만들고자 한다.

○ 식민지 조선의 언론은 수양녀 매개의 여성매매 사건에 대해 빈번하게 다루었다. 그럼에도 부모 탓, 업자 탓만 하면서 손을 놓고 있던 경찰이 수양녀 문제에 나선 것은 전시 동원 체제에 발맞춰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 1938년 5월 국가총동원체제가 시작되면서 여성도 전시 노동력의 대상으로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1939년부터 노동동원계획에 기초하여 노동 동원이 본격화되었고 조선인 남자가 노동력과 병력으로 내몰려진 틈을 메우기 위해 조선인 여성 인력이 국가 자원으로 포함되었다. 남의 집살이를 하는 가사사용인과 함께 접객업자가 '불요불급한 직업'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들을 전시 산업에 전업(轉業)시킬 계획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1939년 하윤명과 매장인 같은 인물이 이끄는 대규모 유괴조직이 검거되었으며, 인신매매를 일삼는 소개업도 비난을 받았다.

- 이로써 식민지 경찰이 나선 '수양녀 제도'에 대한 비판과 '수양녀 해방 운동'이 공론장에 등장했다. 이 시기는 중전쟁이 더욱 확대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을 배경으로 일본의 파쇼적 '시체제'운동에 따른 식민지 정책이 한층 강화된 시기였다. 경기도에서는 1940년 9월 1일부터 '유출항락' 금지령을 실시하고 단속명침을 중지하였는데, 그 가운데 "수양녀의 해방. 각 경찰서에서는 10월 이내로 이를 해산케 하고 권변 행위도 폐지시킬 것"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경찰의 단속과 조치에 따라 '수양녀'는 해방되었을까. 인신매매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차금'이 피해여성들의 생활고를 악화시켰다. 인신의 자유 구속을 목적으로 하는 빚은 감지 않아도 좋다는 일본 판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명침을 '전차금' 앞에서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수양녀들을 돌려보내라는 것은 명령적으로 단호 처리"하였다는 본정 경찰서도 "전차금 관계 같은 일일이 간섭하지 않으리라"고 했다. "수양부모도 인간적 양심으로 돌아와 안생각해볼 문제이며 또 돈을 쓴 친부모 측으로서도 도덕적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수양부모'들은 여성을 되찾는 것으로 불이익을 피하려 했고, 이러한 이유로 하윤명 사건 때 국외로 되팔렸던 피해자 가운데에는 산동성의 담경(呑鏡) 위안소로 보내진 사례도 있었다. 중일전쟁 이후 국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출신지 소재 및 출국지와 입국지 소재의 경찰에게 신분증명서나 도항허가명서를 발급받고 확인받아야 했지만, 여성매매를 목적으로 전쟁지로 떠난 입자와 피해자들은 무사히 국경을 통과했다. 그리고 경찰은 이들의 조색이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명백한 인신매매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국외로 나갔다는 이유로 구제하기를 포기한다면 공권력이 자기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 이처럼 식민지 조선의 '수양녀 제도'는 법률과 빈곤 문제, 공사창 제도와 가부장제 및 공권력의 태도와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식민지 공권력과 언론은 이를 조선 고래의 폐풍 정도로만 인식했을 뿐이다. 19세기부터 국제사회와 일본에서 양녀를 매개로 한 인신매매 문제를 구조적인 문제이자 근대 인권의 문제로 인식했지만 식민지 조선의 '수양녀'들은 그러한 공론장에 올라오지 못했다. 충동원체제가 시작된 후 식민지 공권력은 1939년 만주에서 인력 확보 차원에서 수양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해방' 정책에 나섰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선전했던 식민지 언론은 '인신매매되는 수양녀들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구제하지 않았다. 경찰의 '해방' 정책으로 인해 여학생들은 '수양녀'로 몰려들어 '위안부'로 전락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위안부'로 전락한 수양녀들의 운명을 방치했다. '수양녀'는 '위안부'로 전락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위안부'로 전락한 수양녀들의 운명을 방치했다. '수양녀'는 '위안부'로 전락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위안부'로 전락한 수양녀들의 운명을 방치했다.

젠더관점에서 본 일본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인식: 2014년 아사히 검증을 중심으로

후루하시 아야(이와테대)

4. 맺음말

- 식민주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론
 - 1)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논리(일본전쟁책임자료센터)
 - 2) 법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지만 일본의 현실정치 앞에서 도의적 책임으로 우회하려는 입장(오누마)
 - 3) 법적 책임을 부인하고 도덕적 책임을 인정하려는 입장
 - 4) 법적·도덕적 책임을 모두 부정하는 입장(부인주의자들)

"제국의 위안부는 피해자들에게 일본군인과의 동지적 연대를 설정함으로써 위안부를 제국에 봉사하는 시민으로 승격시키고 급기야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무화시키는 도발적인 프레임이다. 억압당한 자의 전통에서는 자만이 우리의 삶이 예외상태에 속해 있다는 점을 통찰할 수 있다." (이재승, <식민주의와 과거극복의 정치> <<법과사회>> 2015)

- 식민지 법제의 특이성 이해 필요. 합법, 불법, 무법을 넘나들며 식민권력이 식민지 일상을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던 시스템의 내용과 구조를 밝혀야 함
- 전쟁이전 식민지 조선 대만 조차지 대련 등지에서 실시됐던 공권력의 성관리 시스템과 인신매매 매커니즘이 전쟁 이후 전투지나 점령지 등의 일본군 위안소 개설과 '위안부' 동원에 어떻게 변용, 활용되었는지 살펴야.
- 서구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지역에서 일본의 점령지로 옮겨간 지역들의 위안소 개설 특성과 현지 여학생 동원의 특징 고려해야. 아울러 일본이나 조선 외 지역에서 '위안부'로 모집되고 이송되고 배치된 일본인 및 조선인 피해자의 피해 실태도 규명해야 함

젠더관점에서 본 일본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인식: 2014년 아사히 검증을 중심으로¹⁾

후루하시 아야(이와테대)

1. 들어가며

2022년 7월 8일 대낮에 일본 나라현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으로 일본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수상이 참의원 선거 연설 중, 뒤에서 총을 맞아 사망한 사건이다. 용의자의 범행동기가 밝혀지면서 일본에서는 정치와 종교 문제, 정치와 돈 문제로 시끌벅적 떠들고 있다. 한편 아베 전 수상을 신격화하려는 움직임이 강력히 있으며 22일 드디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수상이 이끄는 현 정권은 아베 전 수상을 모시는 국가장을 결행할 것을 각의결정 하였다. 국가장이라는 제도는 일본이 패전을 맞으면서 없어진 제도이며, 1967년에 많은 비판 속에 실시된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전 수상 국가장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된다. 많은 비판들이 나타나 있지만 현재 여론조사로는 국가장 추진에 관한 찬반은 반반이며²⁾ 이

1) 이 발표는, 후루하시 아야, 2017, - 포스트식민주의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인식: 2014년 일본 신문 사실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여성학』 제33권 1호, 267~304쪽 내용 중 아사히 검증에 관한 내용을 기반으로 재구성한 것임을 밝혀놓는다.

2) 국가장 결정에 대한 평가로, NHK 조사로는(2022.7.16.~18일시) 평가한다 49%, 평가하지 않는다 38%, FNN 조사로는(2022.7.23.~24) 평가한다 50.1%, 평가하지 않는다 46.9%로 나왔다. 모든 조사에서 젊은 사람일수록 평가할 경향이 높다고 한다.

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지난 참의원 선거로 여당인 자유민주당(이후 자민당)과 공명당이 의석의 과반수를 얻으면서 앞으로 3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정권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자민당보다 강력하게 자국민 중심주의를 지향하는 일본유신당도 힘을 키우고 있다. 앞으로 일본에서는 자국민 중심적 군국화가 더욱 더 진행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아베 전 수상 및 정권의 행보 없이 이야기할 수 없다. 1993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사실을 인정하여, 사과를 표한 관방장관 담화(이후, 고노담화)를 계기로 1990년대 후반부터 사용될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기술이 등장한 후, 당시 젊었던 아베 전 수상은 1997년 ‘일본 전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日本の前途と歴史教育を考える若手議員の會)’을 자민당 안에 설립하여 역사교육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후 장기 정권을 잡게 되면서도 아베 전 수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련해 일본에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2022년 시점에서 생각하면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가장 진보적인 태도를 보인 시기는 고노담화를 발표한 1990년대 중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역사 교과서 문제를 실마리로 국내에서 일어난 강력한 반박이 자꾸만 화제가 되면서 공격 대상으로 지목되어 일반 사회에서는 금기시되는 주제가 되어 갔다.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는 1993년 고노담화를 계승한다하면서도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사건을 부정하여 책임을 부인한다는 비뚤어진 상황이 지속되었다. 그런 상황이 정리가 된 시기는 2010년대 중반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14년 6월에 진행된 고노담화 검증과 8월 아사히신문 기사 검증, 그리고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이후 2015합의)로 절정에 달했다. 2022년 7월 현재, 일본 국내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이미 끝난 문제로 인식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굳히는 결정타가 된 2014년 8월 아사히신문 기사 검증을 중심으로 그 전후의 담론 상황을 살피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인식을 짚어보기로 한다.

2. 제2차 아베 정권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담론 상황

고 아베 신조는 1993년에 중의원 의원으로 처음으로 출마하여 당선한 후, 2006년 9월부터 수상으로 집권을 했다. 그 당시 아베는 이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역사 문제에 대한 비판적 태도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수상의 입장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2006년 10월에는 협의(狹義)의 강제성과 광의(廣義)의 강제성이 있다는 이상한 주장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여, 2007년 4월에 열린 일미정상회담에서는 부시 대통령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를 하거나 했다. 미국 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정부에게 사죄를 요구하는 결의안(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House Resolution 121)이 제출되자 정권에 가까운 의원과 지식인들이 결의안 채택을 막을 행동을 했는데 결국 2007년 6월에 하원에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제1차 아베 정권은 정권운영을 실패하여 2007년 8월에 수상의 건강문제를 이유로 퇴진했다. 그런데 2009년에 자민당이 민주당에게 정권을 내주면서 야당 지위로 감수했다가, 2012년 12월 다시 여당이 되면서 아베를 수상으로 하여 정권을 잡았다. 이후 아베는 2020년 9월까지 장기 집권했다.

2012년 연말에 제2차 아베 정권이 시작하면서 역사 수정 움직임 역시 힘을 얻어 거세졌다. 특히 「산케이신문」을 중심으로 한 보수계 언론에서 역사수정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그 중심 주제가 된 것이다. 우선 공격 대상이 된 것은 고노담화였다. 담화가 발표된 1993년 당시부터 고노담화를 적대적으로 보는 세력이 존재했으나, 재검토라는 표현으로 담화 철회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2013년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 「산케이신문」(2013.10.16.) 조간은 고노담화 작성 시에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시행한 ‘위안부’ 16명 인터뷰 조사 보고서를 단독 입수한 특종 기사를 1면 톱으로 게재했다. 기사에서는 인터뷰 조사 보고서는 “자료로서의 신빙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하며 “군인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보여주는 정부 자료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고, 결정적 근거였던 전 위안부 인터뷰 조사도 조잡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고노담화의 정당성은 근거부터 무너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4년 1월 1일, 「산케이신문」 조간 1면 톱기사의 제목은 “고노담화 일한 ‘합작’”, “초안 단계부터 서로 조정”이었다. 기사에는 당시의 정부관계자 등의 증언을 바탕으로 “강제성 인정을 비롯해 사소한 부분까지 한국의 의향을 반영시킨 것이었으며 담

화의 기만성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일주일 후인 1월 8일에는 고노담화의 배경이 되며 담화와 함께 발표된 ‘위안부’에 관한 조사 결과 보고도 한국 측의 수정 요구를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서술한다. “거의 ‘한국제(韓國製)’”, “한국 측 지시를 받아 합작한 ‘정치 문서’에 불과하다”는 도발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여 고노담화 및 조사보고를 우롱하였다. 나아가 1월 9일 사설에는 “‘고노담화’ 합작 재검토는 이제 급무”라고 하면서 고노담화 재검토를 주장하였다. 이렇게 2014년이 시작되자마자 「산케이신문」이 추진한 일련의 보도는 여성들 증언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보면서 그것을 들으려고 했던 고노담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보도 후, 일본유신회 야마다 히로시(山田宏) 의원은 고노담화 작성 문제를 국회에서 다루기 위해 2월 20일 이시하라 노부오(石原信雄) 전 관방 부장관을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하게 하였다. 이시하라는 고노담화 작성 당시 관방 부장관으로서, 각 부서에 조사를 요청한 사람이다. 이시하라가 국회에서 말한 내용3)을 정리를 하면, 첫째, ‘위안소’ 설치와 관리, ‘위안부’ 수송에 일본군이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발견했으며, 둘째,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 자료를 찾을 수 없었으나 관헌 및 업자들이 여성들을 강제적으로 연행했을 수도 있다는 것, 셋째, 인터뷰 후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넷째, 고노담화는 일본 정부나 일본군의 지시로 여성을 강제 모집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답변 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당시)은 고노담화의 작성 과정 검증을 약속했다.

그런데 다음 날 「산케이신문」 조간은 이 답변을 “1) 일본군이나 관헌이 강제적으로 여성을 모집했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 2) 담화는 한국에서 전 위안부 16명의 인터뷰 조사를 바탕으로 했으나 추가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3) 담화는 관헌의 직접적 지시로의 모집(강제연행)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산케이신문」, 2014.2.21.)고 정리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군에 의한 ‘위안소’ 설치 및 관리, 또한 ‘위안부’ 수송을 증명하는 자료가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즉 모집 시 강제 연행만 문제로 보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축소시키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나아가 피해생존자들의 인터뷰 조사를 “극히 조잡하며, 증거 능력이 부족한 전 위안부 인터뷰 조사”라고 강조한다. 앞서 소개한 2013년 10월 16일 특종 기사는 일본 정부의 조사가 조잡했다고 주장할

3)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시하라 노부오 참고인(전 관방 부장관)발언(國會會議録検索システム, 2014)

뿐이었다. 그런데 2014년에는 피해자 증언의 가치를 깎아내릴 직접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 피해 생존자 자체를 더럽히는 담론을 노골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산케이신문」의 추격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4월부터는 “역사전(歴史戰)”이라는 특집기사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다. <표1>이 「산케이신문」 역사전 특집 기사를 정리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철저히 더럽히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표1> 「산케이신문」 특집기사 “역사전(歴史戰)”

| | | 제목 |
|----------------------------|-----------|--|
| 역사전 제1부 고노담화의 죄 (1~5)*** | 2014.4.1 | 위안부 문제 정부 ‘유엔보고는 부당’, ‘만들어낸 이야기’에서 오해 연쇄 |
| | 2014.4.2 | 되짜는 한국 시나리오 붕괴 / 위안부 청취는 ‘의식’ 외무상 내부 문서 강제성 알리바이 |
| | 2014.4.3 | ‘위안부’ 호주를 끌어넣은 중한 / 약한 해외 발신 ‘오해’ 방지 |
| | 2014.4.4 | ‘위안부 최대 30만 명 존재’, ‘여기가 아시아 최대’ |
| | 2014.4.5 | 전 정부 고관 ‘조사의 질은 낮았다’, ‘일본 명예를 위해 싸우겠다’ |
| 역사전 제2부 위안부 문제의 원점 (1~5) | 2014.5.20 | 고노담화 청취 대상자 판명, 이름을 늘어놓 허위 증언자 ‘완전한 창작’, 세계에 증식 ‘조선인 위안부 공급원 기초’ |
| | 2014.5.21 | 히로시마 대 부교수 일방적으로 ‘성노예가 있었다’ 아사히 ‘증언 내용을 부정’ |
| | 2014.5.23 | 전 아사히 특파원 ‘바로 정정될 줄’ 미야자와 수상 방한 직전 왜곡 보도 |
| | 2014.5.24 | ‘인도주의적인 ‘친북’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 정대협 상임대표와의 주된 대외, 후원자 소련 붕괴 ‘위안부문제’에 경도 |
| | 2014.5.25 | 대만이나 태국을 동갈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 |
| 역사전 제3부 위안부 한국과의 대화 (1~5) | 2014.6.22 | ‘반일’로 한 묶음 1면 톱 ‘일본 편에 든’ 어떤 전 위안부의 주금 ‘나눔의 집’ 증오를 선동하는 한일 좌파 전시 일상에 녹아든 반일 |
| | 2014.6.23 | 전 위안부 죽어도 ‘반일도구’ 1130번째 ‘구탄 수요시위’ 고노담화 아사히의 ‘단정’은 근거 없는 고노담화 검증, 사실을 일정하지 않는 한국 연행 20만 명 ‘주지의 거짓말’ |
| | 2014.6.24 | 위안부 문제도 안중근도 다 같음, 사실 무시 중한 연계의 불가해 |
| | 2014.6.25 | 한일 모두 착지점 ‘모르겠다’ |
| | 2014.6.26 | 무의미한 배려보다 ‘논쟁’, ‘다원화’ 주장도 반일은 철저히 |
| 역사전 제4부 이용당하는 유엔 (상, 중, 하) | 2014.7.26 | 위원회 ‘위안부는 성노예’ 명기 ‘돈을 받은 것 아니냐’ 반론 유엔의 일방적 일본 비난 정부 이의도 ‘고노담화와 모순’ |
| | 2014.7.27 | 탄생시킨 이는 일본인 변호사 반일 단체, 복과 연계 일본에 압력 유엔 조직을 잘 아는 변호사 |
| | 2014.7.28 | 목소리를 낸 보수계 시만 ‘위안부 실상을 알아 주세요’ 좌파계 아성에 육박할 투쟁 ‘공백의 22년간’을 타파할 때 |

| 특집대목 | 게재일 | 제목 |
|-----------------------------------|------------|---|
| 역사전 제5부 아사히 검증 파문 (상, 하) | 2014.8.23 | 아사히 22년 전부터 인식, 서울 발신 기사로 의의 제기, 믿고 싶지 않는 '요시다의 거짓말' |
| | 2014.8.25 | 한국 신문 '아사히 도와줄 방법이 있을 것임' |
| 역사전 제6부 주전장 미국 (1~4) | 2014.8.30 | 미 수도에서 '강제연행' 선전 차이나타운을 무대로 반일거점 |
| | 2014.8.31 | 아사히 보도 후 불이 붙인 중한 조직 연계로 반일 확대 |
| | 2014.9.1 | 강제연행과 담화 공모하게 이용 미국 사법, 행정은 '결론이 나왔다' |
| | 2014.9.2 | 훈다 씨, 반일 단체 선병에게 '압력 전략'과 '세기의 면죄' |
| 역사전 제7부 무너지기 시작한 벽 (1~5) | 2014.10.26 | '위안부 별로 흥미는 없다 반일이 목적' 한국에서 위안부 배심 |
| | 2014.10.27 | 조집한 전 위안부 청취 담화 급하게 만든 '어름 벌레', 한국 '진상 밝혀서 무엇이 남기나' |
| | 2014.10.28 | 위안부 '우에무라 기사' 아사히 회답 '왜곡' 인정하지 않은 채 증언 테이프만으로 기사 지어진 경력 |
| | 2014.10.29 | '황군 장병에게 드리는 선물' '위안부' 한일 교조가 교재 학교에 가져오게 된 '강제연행' |
| | 2014.10.30 | '사죄 전술 효과 없음' 일어나는 지방 의회 |

국회에서 약속한 대로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 작성과정 등에 관한 검토팀'을 구성하여 담화 작성과정 검증을 실시했으며, 6월 20일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검증을 통해 한일 양국 담당자들이 서로 입장을 존중하면서 최대한 양보하는 자세로 교섭에 임한 모습이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이미 담화 초안이 나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보수계 언론들이 거듭 주장하던 “조잡”한 인터뷰 조사를 근거로 작성된 담화라는 비판은 효과를 잃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새삼스럽게 밝혔다.

이 보고를 둘러싸고 일본 주요 언론들의 평가는 나뉘었다. 보수계 언론서(『산케이신문』, 『요미우리신문』)은 고노담화를 철회를 다시 요구했다. 일본이 “강제연행”을 했다는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오해”를 바로잡으려면 담화를 철회해야 할 것이고, “근거 없는” 담화로 인해 “일본의 명예”가 손상되어 있다고 분노를 표한다. 그들에 있어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명예를 손상시킨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진보계 언론(『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은 담화 작성 시 양국 정부의 자세를 평가하고, 현재 한국 태도를 비판한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담화 검증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크게 반발하고 대항 조치를 취하겠다고 표명했는데 이 태도를 비

판하는 것이다. 한국의 “일방적 비판”이 일본의 태도를 굳어지게 만들 원인이라고 간주했다. 2014년 6월 당시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보수계 언론의 기세는 약해지지 않았다. “조잡”한 인터뷰 조사를 근거로 담화를 만들었다는 주장은 불가능해졌지만, 고노담화가 근거하고 있는 조사는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은 지속되었다. 게다가 한국의 눈치를 보고 사죄하겠다는 결정이 선행된 담화라는 비판과 이 담화 때문에 일본의 명예가 손상되어 있다는 주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일련의 보도를 통해서 고노담화는 검증을 받아야 할 만한 것, 즉 의심스러운 것이라는 이미지가 대중들에게 확산된 것이 더 중요하다. 그들은 고노담화를 철회시키지 못했지만,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3. 아사히 검증 내용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범죄성을 일찍부터 부정해 온 하타 이쿠히코(秦郁彦)가 1999년에 쓴 『위안부와 전쟁터의 성(慰安婦と戰場の性)』은 이 문제의 범죄성을 부정하는 논자들에 의해 계속 이용되었다. 하타의 주요 논지는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창제도는 어느 시대, 어느 곳에도 존재했으므로 문제가 없다. 둘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정치문제로 왜곡하려는 세력과 음모 때문에 외교문제화 되었다. 이 논지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조선인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 연행했다는 요시다 증언은 거짓이다, 요시다 증언을 인용한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가치가 없다, 여성들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다, 미야자와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시기에 맞춰 일본군 관여에 관한 자료를 공개한 『아사히신문』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정치 문제화되었다 등을 주장한다. 이 주장을 바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범죄성을 부정하는 논자들은 『아사히신문』을 일본을 더럽히는 세력으로 보고, 『아사히신문』 공격에 나섰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아사히 문제’라고 보는 주장까지 등장했고, 아사히신문사 본사 앞에서 반대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이에 반응한 독자들은 『아사히신문』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부정적인 의견을 보내왔고, 판매 부수와 홍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朝日新聞社第三者委員會, 2014: 29).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아사히신문』은 8월 5일과 6일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견해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과거의 ‘위안부’ 관련 기사를 검증할 특집 기사를

실었다⁴⁾. 5일 기사는 초기 인식을 둘러싼 담론에 대한 내용이며, 6일 기사는 일본 정부 대응 평가가 주된 내용이었다. 먼저 5일 기사부터 살펴본다.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보도에 대한 여러 의문에 답하기 위해” 초기 인식을 둘러싼 담론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2>와 같다.

<표 2> 「아사히신문」(2014.8.5.) ‘위안부’ 검증 기사

| 주제 | 외부에서 받은 비판, 질문 | 「아사히신문」의 반론 |
|------------------|--|---|
| 강제연행 |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을 애매하게 사용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연행이라는 말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정의가 다르다” • 식민지였던 조선이나 대만에서는 “빈곤이나 가부장제를 배경으로 매춘업자가 횡행하여 일본군이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취업 사기나 인신매매 같은 방법으로 많은 여성을 모을 수 있었다” • “문제의 본질은 일본군이 관여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었던 위안소에 여성들이 자유를 빼앗겨 존엄을 침해당했다는 데 있다”, “의사에 반해 위안부가 되었다는 의미로 강제성이 있다” |
| ‘제주도에서 연행했다’는 증언 | “위안부로 끌고 가기 위해 여성을 폭력적으로 억지로 연행했다고 저서나 집회에서 증언한” 요시다 세이지의 이야기는 허위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언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으며, “연구자 취재를 통해 증언의 핵심 부분에 대한 모순이 몇 가지 밝혀졌”으므로 “요시다씨가 제주도에서 위안부를 강제연행했다는 증언은 허위라고 판단하여 기사를 취소”하겠다. |
| ‘군의 관여를 보여준 자료’ | “1992년 1월 11일 조간 1면에서 보도한 <위안소, 일본군의 관여를 보여주는 자료>”라는 기사는 총리의 한국 방문을 겨냥한 “의도적인 보도”였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자는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기사를 썼다. • 일본 정부는 보도가 나오기 전에 자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 |
| ‘정신대’와 의 혼동 | ‘정신대’와 ‘위안부’라는 단어를 혼동해서 사용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시는 연구가 부족해서 두 단어를 혼동해서 오용했다. • 1993년 이후 오용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
| ‘전 위안부 첫 증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증언 보도는 집필 기자의 개인적 의도가 있었다. • “1) 장모가 편의를 도모해줬다, 2) 여성이 기생학교에 다니던 것을 숨기며 인신매매인데도 강제연행된 것처럼 썼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모가 소속했던 단체(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와 기자가 정보를 얻은 단체(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다른 단체다. • 취재 중에 기생학교에 대한 정보는 얻지 못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다. |

4) 해당 기사를 모두 온라인으로 읽을 수 있다. <https://www.asahi.com/shimbun/3rd/3rd.html>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5일에 실린 기사는 “여러 의문에 답하기 위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990년대 후반부터 계속 재생산되어 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범죄성을 부정하는 담론에 대응하는 형식이 되었다. 즉, 의문에 답한다기보다는 오랫동안 모든 악의 근원으로 지목되어 온 것에 대한 반론을 시도한 것이었다. 이 시도는 실패로 끝났는데, 왜냐하면 「아사히신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범죄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틀을 완전히 답습한 채 논의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사히신문」이 취소한 요시다 증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문제성을 지적하는데 1990년대 후반에는 이미 중요한 자료가 아니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사료 조사에 앞장 서왔던 요시미도 1997년에 이미 증언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吉見·川田, 1997). 그래서 1995년에 나왔던 쿠마라스와미 보고서⁵⁾를 제외하고 이후에 나온 유엔문서를 포함한 모든 국제문서⁶⁾에서는 요시다 증언을 근거로 삼은 적이 없다. 「아사히신문」은 이미 결말이 난 논의를 가져와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기사에서 “문제의 본질”은 “여성이 자유를 빼앗겨 존엄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없고 그 인상은 약했다. 즉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해결 운동의 의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이 문제의 범죄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을 쓴 결과, 자멸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언론들은 곧바로 「아사히신문」이 부분적으로 인정한 실패에 트집을 걸기 시작했다. 「아사히신문」의 검증 기사에 대한 다른 언론의 주된 반응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요시다 증언을 취소했다는 것에 많은 관심이 기울어졌다. 「마이니치신문」 석간(2014.8.5.)은 “‘강제연행’ 기사 취소”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산케이신문」 조간(2014.8.17.)은 “아메리카 노트”라는 코너에서 “미국에서 볼 때 악의 핵심은 ‘일본군이 여성을 조직적으로 강제연행했던 것’이 전부”이며,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일본에서 발신된 ‘증언’, ‘자료’, ‘보도’”이며, “그 발신을 담당자가 아사히신문”이었는데, “아사히 자신이 그 ‘증언’, ‘자료’, ‘보도’ 모두가 허구였다고 하니 사태는 심각하다”고 했다. 즉 「아사히신문」은 요시다 증언을 취소하겠다고 말한 것뿐

5) 쿠마라스와미보고서(E/CN.4/1996/53/Add.1)란 1996년 1월 4일에 유엔인권위원회에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관인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가 제출한 보고서를 말한다.

6) 중요한 국제 문서로는 유엔 인권위원회 차별방지 소수자·보호소위원회에 전시성노예제 특별보고자인 게이 맥두갈(Gay McDougall)이 제출한 보고서(E/CN.4/Sub.2/1998/13)가 있다.

인데도 불구하고 「산케이신문」은 그것을 확대 해석하여 “모두가 허구”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체를 무효화하려고 한다.

두 번째는 정신대와 ‘위안부’라는 용어의 오용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산케이신문」의 특집 기사(2014.8.23.), “역사전 제5부 ‘아사히 검증’의 파문 (상)”에서는 “이 혼동(정신대와 ‘위안부’-연구자)이야 말로 한국의 반일단체 등이 주장하는 ‘위안부 20만 명 강제연행’설의 근간이 되었다”면서 용어 오용에 대해 비판한다. 즉 「아사히신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범죄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서 받아왔던 비판에 반론하는 형식으로 검증을 실시했으나 오히려 강제연행 문제로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는 관점을 키워주는 논거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끝났다고 할 수 있다.

「아사히신문」의 검증 기사 이튿날인 6일은 “일한 양 정부의 해결을 향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가”라고 질문하며 “고노담화, 한국 정부도 내용 평가”, “아시아여성기금에 시민단체 반발”, “한국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다시 근심”이라는 세 가지의 사건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다른 언론사들은 6일 기사 내용을 거의 주목하지 않았으나 「아사히신문」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자세를 보기 위해서 중요한 자료이다.

「아사히신문」(2016.8.6.)에는 전반적으로 고노담화 및 아시아여성 기금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가 얼마나 많이 노력해왔는지가 기술되었다. 먼저 일본 정부의 노력을 한국 정부도 이해하여 합의가 성립되었던 상황이 묘사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처음에는 아시아여성기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중간부터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엇갈림이 커졌다”고 한다. 한국에서 시민단체가 반발하여, 한국 언론이 “기금에서 지불하는 ‘쓰구나이금(償い金)’을 ‘위로금’으로 잘못 번역한 것도 한국 여론이 아시아여성기금의 취지를 이해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반발이 커졌다고 설명한다. 결국, 한국 정부는 “태도를 바꾸어”, “김영삼 대통령은 진상규명을 강조할 뿐 기금을 받을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서술한다. 또한 한국의 시민단체가 한국에서 모금활동을 전개하여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주기 시작했으므로 “기금의 활동이 한층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나 지원단체가 아시아여성기금에 반발한 이유는 묻지 않고, 시민운동의 방해로 인해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는 완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식으로 서술된다. 또한, 2011년 한국 헌법재판소 결정이 “위안부 문제를 다시 일한 간의 큰 외교문제로 만들었다”고 한다. 나아가 2011년 12월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 “이 문제를 상징하는 소녀상”이 건

립되면서 “일본 내 여론은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직후에 시행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일한 수뇌가 위안부 문제로 응수하는 사태로까지 발전”되었다고 한다. 박근혜 정권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한층 더 혼란에 빠져”, “금전 요구는 하지 않겠다”는 김영삼 정권 시대의 방침까지 무너졌다고 한다.

즉, 일본 정부는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써왔으나 아시아여성기금에 대한 한국 시민단체나 여론의 반발로 조금씩 틈이 생기고, 결국 한국 정부는 시민단체의 힘에 밀려 정부 간에 약속했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교섭조차 못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아시아여성기금은 설립 이전부터 많은 피해자와 시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이사로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역시 “실패였다”(和田, 2015)고 밝힌 것처럼 그 문제성을 검증해야 할 대상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아사히신문」은 문제성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는 채 한국 시민단체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6일 특집 기사는 일본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해결을 막은 주체를 한국의 일방적 태도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고노 담화 재검토 때 진보계 언론들이 보여준 태도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아사히 검증 이후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대한 반동으로 일본 사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이제 끝났다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즉, 강제연행을 증언한 요시다 증언은 허위였으며, 강제연행을 인정한 고노담화는 엉터리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본이 반성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다. 이 사태에 아베 수상(당시)은 10월 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잘못된 보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상처받았다”면서 “정부로서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정립시키고 일본의 대응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국제사회에서 받을 것을 요구해 갈 생각”이라고 밝혀, 전략적인 대외 활동의 중요성을 주장했다.⁷⁾

7) 중의원 예산위원회 아베 신조 총리 발언(國會會議録検索システム, 2014.10.3.)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범죄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국제 사회의 인식을 ‘바로 잡는’ 행동을 시작한다. 10월에는 일본 정부 관계자가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를 집필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씨를 직접 찾아가, 아사히신문이 요시다 증언을 철회한 것을 지적하고 보고서 수정을 요구했다. 쿠마라스와미 씨한테서는 거부당했지만 이 뉴스는 일본에서 비판적으로 보도되었다.

국내에서도 인식 수정에 나섰다. 외무일본군 ‘위안부’ 문제성 웹사이트에 게재된 아시아여성기금 관련 문장에 있던 “10대 소녀까지 포함해서 많은 여성을 강제적으로 ‘위안부’로써 군대를 따르게 한 것은 여성의 근원적인 존엄을 짓밟은 참혹한 행위였습니다”라는 내용이 삭제되었다. 이는 10월 6일 차세대 당 야마다 히로시 의원(당시)이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관해 문제 삼았는데 기시다 후미오 외무 대신(당시)은 이에 답하면서 “삭제하든지 아니면 주석을 붙이든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똑똑히 검토하겠습니다”고 대답한 것이다. 며칠 후 설명도 없이 그 문서 전체가 삭제된 사실이 밝혀졌다.

2015합의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온 것이다. 합의 이후 보수계 언론에서는 이미 끝난 문제를 왜 다시 합의를 해주냐는 비판 목소리가 나타났다. 진보계 언론에서는 일본 정부가 많이 양보했다고 인지했다. 당시 한국에서 2015합의를 비판하면서 거론된 피해자중심주의라는 담론을 이해할 수 있는 토양은 애당초 일본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다.

5. 나가며

한국에서 2022년 5월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2015합의 이행을 주력하겠다고 일본 정부에게 전달했다고 보도되었다. 2015합의가 무엇이였을까를 생각할 때 그 합의가 만들어졌을 때 일본 담론 상황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발표에서 정리했듯이 제2차 아베 정권 하에 보수계 언론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무효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 정부도 그와 보조를 맞추었다. 보수계 언론과 아베 정권은 ‘위안부’ 문제를 강제연행 문제로 좁히면서 일본군이 ‘위안소’를 설치·운영한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무시하였다. 여성들은 증언 능력이

없는 대상으로 보고 목소리를 오히려 조롱 대상으로 삼았다. 결과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문제라고만 생각한 것이다. 일련의 행동은 성폭력 가해자가 가해자로 지목받았을 때 취하는 행동과 아주 닮아 보인다.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부정하려는 그러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볼 수 있다. 반면, 진보계 언론은 1990년대 일본 대응을 높게 평가하면서 현대 경직 상황을 한국 대응 탓으로 해왔다. 일본 정부가 반복적으로 해온 범죄 부정 행위를 지적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지원하는 측 탓으로 하는 행위는 또 다른 2차 가해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15합의 이후 일본에서는 한국이 그 내용을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일본에서는 이제 책임 없다는 거친 태도로 일관한다. 그런데 기시다 후미오 현 수상이 2021년 12월에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일본정부도 기본적 입장으로 고노담화를 계승한다고 한다.⁸⁾ 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고노담화에 다시 되돌아갈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고노담화가 해낸 것과 못한 것, 전진했다가 후진된 것, 그리고 그 이유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8) 중의원 본회의에서 일본유신당 바바 노부유키(馬場伸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중의원 본회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 발언(國會會議錄檢索システム, 2021.12.9.)



2022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 학술회의

램지어 '답변'에서 드러난
역사부정주의의 조직화와 '램지어 구하기'의 실체:
"A Response to My Critics"(2022) 비판을 중심으로

강성현(성공회대)

램지어 ‘답변’에서 드러난 역사부정주의의 조직화와 ‘램지어 구하기’의 실체: “A Response to My Critics”(2022) 비판을 중심으로

강성현(성공회대)

1. 잘못된 만남: ‘반일 종족주의’ 현상의 확산과 영향

2020년 12월 국제법경제학리뷰(IRLE) 65 온라인판에 램지어(J. Mark Ramseyer)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이 게재되었다. 일본 우익 언론 산케이가 이를 보도했고 곧바로 한국과 미국에서도 관련 보도가 확산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램지어의 주장이 큰 파문을 일으켰다.

미국과 호주, 일본과 한국 등 학계에서는 그의 논문을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과 학술적 외양의 사기로 판명했다. 그러나 램지어 본인은 물론, ‘램지어 구하기’에 나선 한국과 일본의 역사부정주의자들은 이를 거부해왔다. 램지어도 약 1년 만에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A Response to My Critics”(이하 “답변”)를 들고 나와 반론을 시도했다. 그는 자신의 주장과 논리, 자료 분석의 실증적·해석적 방법이 수준 미달이었다고 평가한 비판자들의 작업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그가 상대한 건 미국의 고든과 에커트 교수, 석지영 교수, 스탠리 등, 일본의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 비판이다. 그는 하버드대 동료들, 장문의 페이지로 신랄하게 체계적으로 비판한 나머지 자신에 대한 “암살미수”라고 느끼게 한 “젊은 교수들”, “위안부 운동의 학계 유명 인사”인 일본인 남성 교수를 선정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호주의 일본사 연구자 테사 모리스 스텔리를 비롯해 공창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평생

연구해온 재일조선인 및 페미니스트 연구자, 무엇보다 그를 비판한 모든 한국인 연구자들이 무시되었다. 램지어에게 젠더와 식민주의 문제가 소거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번 램지어의 페이지에는 ‘램지어 구하기’에 나선 한국의 역사 부정주의자들의 주장이 솔하게 인용된다. 그들 대부분은 이 주제와 관련해 학술장에서 심사받거나 인정되는 학술적인 글을 쓰지 않았고, 학계와 운동에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근래 역사부정과 혐오 표현과 활동 때문에 대중적으로 악명 높은 인사들이다. 램지어는 이런 인사들의 말과 글을 ‘상호참조’함으로써 선별적인 역사전쟁을 벌이고 있다. 주지하듯, 이 사태는 갑자기 벌어진 것이 아니다. 2013년 일본 극우 역사 부정주의자의 ‘역사전쟁’이 미국이라는 ‘주전장’으로 확산된 결과이다. 또한 2019년 한국 뉴라이트 역사부정주의자들이 출간한 『반일 종족주의』로 야기된 한일 ‘합작’의 반일 종족주의 현상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주지하듯, 2019년 7월 한국에서 『반일 종족주의』가 출간되었고, 그 해 11월 일본에서 번역 출간되었다. 한국에서는 2개월 만에 10만 부 이상, 일본에서는 40만 부가 팔리면서 시작은 ‘우파도서 베스트셀러’ 현상이었다. 그러나 금새 유튜브 등 뉴미디어의 역사전쟁 콘텐츠로 전화되었고, 빠른 속도와 대량으로, 트랜스내셔널하게 ‘조회’되고 ‘구독’되면서, 한국, 일본, 미국에서의 역사부정주의 네트워크가 양질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뉴미디어 기술과 플랫폼의 영향 때문인지, 홀로코스트 ‘부정론자 인터넷내셔널’의 연대보다 더 극적인 것처럼 보인다.

한국에서 ‘반일 종족주의’란 말은 책의 저자 이영훈의 신조어로, 한국인이 거짓말 문화, 별거벗은 물질주의와 샤머니즘에 매어 있고 이웃 일본을 향해 ‘종족’의 적대 감정을 표출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¹⁾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과 이의 지지자들은 식민주의와 전쟁의 피해자 위치를 거부하고 일본제국주의의 가해자 시선에 완전히 동화시키고 있는데, ‘친일’이 ‘애국’이고, 그것이 ‘친미’와 ‘반중’과 ‘반북’이라는 확고한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다.

‘반일 종족주의’ 현상은 한일 역사부정주의자들이 합작해 만든 거대한 ‘백래시’다. 2020년 5월 정의기억연대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타겟으로 한 역사부정

1) 이영훈 외, 『반일 종족주의』 미래사, 20-21쪽.

과 혐오가 넘실거렸다. 때마침 ‘5.16 군사쿠데타’를 기념해 반일 종족주의 두 번째 책인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이 출간되었고, 그 자장 아래에 있는 뉴라이트 및 역사부정 세력의 의도된 기획이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을 이용해 윤미향 전 대표와 정의연을 공격하는 사태로 번져나갔다. 이 사태를 보도했던 극우 가짜뉴스 매체들은 물론, 보수 일간지들의 프레임과 기사에서도 ‘반일 종족주의’의 언어, 논리와 수법이 재현되었다. “정대협은 그들의 공명심을 충족하기 위해, 그들의 직업적 일거리를 잇기 위해” “개인의 인생사 따윈 아무래도 좋은 것으로 팽개치고” 위안부를 “민족의 성녀로” 앞세워 시위를 벌이면서 “아무도 맞설 수 없는 전체주의적 권력으로 군림하였다”²⁾는 수준의 이해와 내용이 한국의 신문기사들에서 등장했다. 그리고 이 기사들은 해당 신문의 일본어 온라인판으로 거의 동시에 일본에 출고되었다. 이를 받아쓰는 일본 극우보수 언론은 이 사태를 윤미향, 정의연,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일본군 ‘위안부’ 운동 30년의 역사를 부정하고 혐오하는 사실 근거들로 삼아 보도했고, 한국 보수 언론은 이를 다시 현지(일본) 특파원 칼럼 등의 형식으로 한국어로 보도하면서 결과적으로 부정과 혐오로 가득한 가짜가 진실인 것처럼 보도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램지어도 “Comfort Women and Professors”(2019)에서도 정대협과 윤미향의 ‘반일’ 캠페인이 ‘친북’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처럼 곳곳에서 매카시즘적인 인식을 드러냈는데, 그 내용은 그대로 “A Response to My Critics”에도 유지된다. 그리고 2020년 사태를 반영해 윤미향의 후원금 횡령 혐의(재판 진행 중)를 언급하고,³⁾ 더 나아가 “이용수가 윤미향의 후원금 횡령을 주장”하자 “윤미향이 이에 대한 복수로” 이용수의 가짜 ‘위안부’ 사실을 폭로했다고 서술한다.⁴⁾ 정대협-정의연 및 윤미향과 관련한 램지어의 주장은 과잉 해석된 소스 또는 허위 소스의 한일 상호참조, 또는 상호인용으로 워낙 사실 오류와 왜곡이 많기는 한데, 이번에 새롭게 이용수=가짜 ‘위안부’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윤미향의 폭로를 든 것은 연구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2) 위의 책, 337-338쪽.

3) Ramseyer, J. M. (2022).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A Response to My Critics. Harvard John M. Olin Center for Law, Economics, and Business Discussion Paper No. 1075, p.22.

4) 위의 글, p. 18.

에 없게 한다. 그는 윤미향의 페이스북 글에 대한 일본 극우잡지 후지와 하나다 기사의 탈맥락적 조작과 왜곡을 그대로 인용했다. 그는 연구자로서 윤미향 글의 전문을 직접 크로스체크 하지 않고, 이용수 증언이 일관되지 않고 허위임을 “이 분야 대부분의 학자들이 오래전 결론 내렸다”고 주장하며, 윤미향의 페이스북 글의 일부 문장을 탈맥락적으로 절취하는 수법을 썼다. 사실 윤미향과 이용수 할머니가 전화로 처음 만났던 장면이 대한 윤의 서술은 ‘위안부’ 운동을 하는 활동가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꽤 알려진 일화다. 1992년 신고 전화를 건 이용수 할머니의 말, “저는 피해자가 아니고, 제 친구가요”라는 말은 정말로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다. ‘위안부’ 피해생존자가 1992년에 스스로 ‘위안부’였음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적어도 윤미향은 그런 의미에서 쓴 것이다. 그럼에도 램지어 등 역사부정주의자들은 ‘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의 증언의 진실성을 공격하기 위해 그 운동의 대표 활동가의 말을 탈맥락적으로 절취해 목소리를 빼앗고 찬탈했다. 그리고 이런 시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2022년 4월 6일 한국의 역사부정주의자이자 램지어가 극찬한 바 있는 김병헌은 이용수 할머니를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증’했다는 혐의로 고발했다. “피고발인의 혐의가 입증된다면 엄한 벌을 내려주실 것을 바”란다는 그의 고발장은 학문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발하는 겁박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2. 한국 역사부정주의의 조직화와 ‘램지어 구하기’

2020년 1월 1일 한국의 역사부정 세력이 조직한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이하 반일동상공대위)가 4차 위안부상 반대집회를 처음으로 광화문 평화의비(소녀상) 근처에서 개최했다. 지금까지 회자될 정도로 유명한, 이 집회를 성격을 상징하는 황의원(미디어워치 대표, 반일동상공대위 공동대표)과 이우연의 사진이 있다. 이우연 옆에서 황의원은 “위안부상 철거! 수요집회 중단!”이 써 있는 작은 펼침막과 함께 한 손에는 태극기, 다른 손에는 입장기를 들고 있다. ‘위안부’ 문제를 역사부정 혐오하는 방식으로 반문재인정부=반북=반중을 위해서 친일=친미를 커밍아웃한 뉴

라이트 성향의 역사부정 세력과 뉴미디어들의 등장을 알리는 집회였다.⁵⁾ 일부 미디어와 학교(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진지하게 친일이 곧 애국이라 외치는 집단이 1945년 ‘8.15’ 이후 처음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2020년 5월 역사부정주의자들의 공격이 뉴미디어는 물론 레거시 미디어에도 오르내리면서 한국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부정과 혐오는 예외적인 사태가 아니게 되었다. 극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10대와 60대 이상 일부에 해당하겠지만, 이 집단에게 역사부정과 여성혐오는 극우 정치의 한 동원 방법이며, 심지어 ‘핫’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들은 2020년 5월 12일 23차 위안부상 반대집회를 개최하고 평화의 비(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특이한 것은 ‘위안부인권회복실천연대’란 단체가 같이 했다. 이우연, 황의원, 그리고 김병헌(국사교과서연구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역사부정주의자의 입에서 “치욕스런 위안부 이력 속속들이 까발려 모욕 준 정대협과 여성가족부는 용서 못할 인권침해 집단”이라는 말이 나왔다. 피해생존자들을 조롱하고 모욕한 그들의 입에서 저 단체의 이름처럼 피해자의 ‘인권’이 거론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간악하게 이용해먹는 ‘복화술’이었다.

2021년 ‘램지어 사태’가 터졌을 때, 이들의 ‘램지어 구하기’ 활동은 한국 국내는 물론 트랜스내셔널한 역사부정 활동 반경을 보여주었다. 니시오카 쓰토무 등 일본 역사부정주의자와 연대하면서, 2월 9일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위와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주도해 램지어를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내용인 즉, 램지어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투고돼 동료심사를 거쳐 게재 승인을 받았고 독창성을 인정받았는데, 학문과 무관한 외부 세력이 망언 운운하며 학술 토론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대혁명을 연상시키는 반학문적 망동이라는 것이다.⁶⁾ 2월 14일에는 황의원이 하버드대 교수들에게 “램지어 교수의 학문적 양심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메일을 발송했고, 2월 17일 하버드대 법대 아시아계 학생회가 주최하는 이용수 할머니의 초청 강

5) 이들은 문재인정부의 대일정책의 근본이 ‘반일 종족주의’에 기반한 민주화 세력의 반일 역사관에 비롯되었다고 인식한다.

6) 정규재 · 김대호 · 주동식 · 한민호 · 이영훈 · 류석춘 · 주익종 · 정안기 · 이우연 · 김병헌 · 최덕효 · 황의원 · 김기수 · 이동환 · 김소연, “하버드대 교수의 위안부 논문,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본격적 토론의 계기로 삼아야!” (2021.2.9.)

연을 거부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하버드대에서 열리는 가짜 위안부의 ‘증언 쇼’를 보이콧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교수와 학생들에게 보낸 것이었다.⁷⁾ 2월 18일에는 조셉 이(Joseph Yi)와 조 필립(Joe Philips)가 The Diplomat에 램지어를 지지하는 글을 투고했는데,⁸⁾ 이 글에서 ‘위안부’ 강제연행(abduction) 이야기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소수의 학자들은 너무 자주 활동가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대학에서 조사받고, 정부에 의해 기소된다.”는 주장이 램지어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램지어는 “A Response to My Critics”(2022)에서 조셉 이 등의 글을 인용해 박유하 교수와 순천대 송 교수(송대엽)를 “금기에 도전하는 학자들의 대가는 놀라울 정도로 높다”고 언급한다.⁹⁾ 그러면서 그는 이 명단에 류석춘 교수도 끼워 넣는다. 그러나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져 재판이 진행되었다는 점은 유사해 보이지만, 박유하 사례와 달리 송 교수와 류석춘 교수 사례에는 강의실에서 성희롱·성폭력 발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따라서 이들을 금기에 도전하는 학문과 표현의 자유 투사로 만들기에 큰 무리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4월 26일 송 교수는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사실을 강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성폭력 발언을 했기 때문에 순천대에서 파면되었는데, 그것에 불복한 송 교수가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광주지방법원(행정2부)는 송씨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2019년 2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판결했는데, 그 이유로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함께 “강의 중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해 학생들에게 정서적 폭력을 가했다”고 적시했다.¹⁰⁾ 류석춘 교수의 재판에 대해서도 민사재판, 형사재판(현재 진행 중) 둘 다 진행되었고, 그 가운데 판결이 이루어진 민사재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7) 김건휘, 「“이용수는 가짜 위안부”... 하버드 강연 방해까지」, MBC 뉴스 2021.2.15.

8) Joseph Yi and Joe Philips, “On ‘Comfort Women’ and Academic Freedom,” The Diplomat, February 18, 2021.

9) Ramseyer, 앞의 글, 2022, p. 5-6.

10) 송 교수는 램지어가 쓴 것처럼 “일부 한국인이 아마도 ‘아마도’ 위안부가 되겠다고 자원했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할머니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사실 다 끼가 있으니 따라다닌 거야”, “20대 여성은 축구공이라고 한다. 공 하나 놔두면 스물 몇 명이 오간다.” “걸레” 등의 말을 수차례 학생들에게 했다. 장아름, 「법원 “위안부 피해자 모독 순천대 교수 파면 징계 정당.” 끼가 있으니 따라다닌 것... 학생들 가리켜 ‘걸레’ 비하 표현도」, 연합뉴스 2019.8.25

민사재판은 류석춘이 대학에 징계처분(1개월 정직) 취소를 요구하며 낸 소송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행정14부)은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강의 중 학생의 반론에 대해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한 말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징계 타당)을 내렸다.¹¹⁾ 두 케이스만 놓고 보면,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역사부정론 인식에 기반한 발화가 왜 성희롱·성폭력 같은 파렴치범 행위로 이어질까, 혹시 ‘위안부=매춘부’에 대한 여성혐오적 시선과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이우연과 조셉 이처럼 학자는 아니지만, 황의원의 활동이 역사부정주의자들 중에서도 발군이다. 그는 일찍부터 신규양이라는 필명으로 미디어워치에서 이용수 할머니와 여러 피해생존자들을 조롱하고 부정하는 기사들을 써왔다. 그가 미디어워치 대표와 반일동상공대위 공동대표로서 언론과 거리에서 램지어 구하기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벌이고 활약한 것은 충분히 예상할 만한 일이다. 특히 이우연이 한국어로 번역한 니시오카 쓰토무의 책을 출간한 것이 황의원의 미디어워치였다. 일본 극우잡지의 광고라든지 니시오카 쓰토무 등의 기사를 많이 실는 미디어워치가 어떤 돈으로 일본 역사부정주의를 대표하는 책들을 출간하고, 이를 사방팔방에 증여할 수 있는지 짐작이 간다. 2021년 4월에는 니시오카 쓰토무의 ‘위안부’ 관련 책¹²⁾이 ‘램지어 구하기’ 활동과 맞물려 한국어로 출간되었다. 일본 역사부정주의자들도 이를 충분히 인정해준 것인지, 황의원은 이우연과 함께 일본 국가기본문제연구소(이사장 사쿠라이 요시코)가 수여하는 8회 일본연구상을 공동 수상했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 스가 총리가 ‘자민당 총재’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대신이 ‘자민당 중의원 의원’의 이름으로 황의원에게 축전을 보내줬다는 사실이다. 황의원이 “일본의 진정한 친구를 국제사회에 늘려가고 싶”은 취지의 일본연구상을 받을만한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이를 치하하고 싶었던 것이다.

11) 재판부는 “류씨는 이 사건 발언 전후에 ‘위안부’ 여성과 관련해 이들이 기본적으로 매춘행위에 종사한 자라는 취지의 내용을 설명했고, 학생과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계속 ‘매춘’을 언급했을 뿐 연구행위와 관련한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며 “류씨가 수강생들에게 ‘궁금하면 매춘을 한번 해볼래요?’라고 한 취지로 해석되고, 이는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민정, 「‘위안부’ 망언하며 학생 성희롱 류석춘... 법원 “징계정당”」, 한겨레 2022.2.28

12) 원저 이름은 『알기 쉬운 위안부문제よくわかる慰安婦問題』다.

반일동상공대위가 거리의 역사부정 전위조직이라면, 이영훈·주익종이 이끄는 이승만학당과 이승만TV(유튜브 채널)는 역사부정주의의 진지전을 수행하는 교육 미디어라 할 수 있다. 이승만학당은 2018년 6월 15일 이승만TV를 개설한 이후 “반일 종족주의 타파”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 강의 시리즈를 편성했는데, 이 강의 콘텐츠 일부가 100만에 육박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10만 구독으로 이어지면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반일 종족주의』도 강의 콘텐츠 원고를 바탕으로 출판했다. ‘램지어 사태’와 관련해서 이승만TV는 기존 “반일 종족주의 타파” 시리즈에 2021년 2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총 11개 한국어 및 일본어 강의를 추가로 편성했다. 2022년 3월 2일 강의는 램지어의 “A Response to My Critics”이 출간되자 이를 해설하는 강의다.

| 날짜 | 강의제목 | 강의자 | 조회수 |
|-----------|--------------------------------------|-----|--------|
| 2020.2.10 | 하버드교수의 위안부 논문 바로 읽기 | 주익종 | 10,749 |
| 2.12 | ハーバード大教授の慰安婦論文を正しく読む | 주익종 | 20,694 |
| 2.19 | 위안부 계약의 증거 | 주익종 | 11,723 |
| 2.20 | ‘慰安婦契約’の証據 | 주익종 | 12,155 |
| 2.28 | 일본에선 자발적 계약이었지만, 조선에선 강제연행이라고? | 주익종 | 5,651 |
| 2.28 | 日本では自發的契約だったが、朝鮮では強制連行か? | 주익종 | 15,332 |
| 3.7 | 고명하신 미국 교수님들의 램지어 비판을 살펴보니 | 주익종 | 10,426 |
| 3.9 | 有名なアメリカの教授達のラムザイヤーの批判を見てみると... | 주익종 | 21,817 |
| 3.12 | 한 ‘양심적’ 일본학자의 램지어 비판을 살펴보니 | 주익종 | 6,642 |
| 3.13 | 吉見義明教授のラムザイヤー批判を見てみると -慰安婦性奴隷論者の知的破綻 | 주익종 | 30,593 |
| 2022.3.2 | 램지어 교수 논문 후 1년 - 위안부 논쟁의 현재 | 주익종 | 6,768 |

*2022.6.12. 기준 작성

*출처: 이승만TV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ZZEzygYtel4j4_DxNqAAiz10XOeZoUvS

램지어 구하기로 재조직화되는 ‘반일 종족주의’ 관련 주장과 논리는 반박하기 어렵지 않다. 이들은 반복적으로 자신들이 ‘기본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편향된 자료 선별과 의도된 자료 오독 및 생략, 왜곡된 전거가 많다. 이에 하나하나 실증적·해석적·구조적 분석 방법으로 교차 검토해가며 역사부정주의 주장에 얼마든지 비판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탈진실 시대 뉴미디어 세계와 양분화된 진영의 한쪽에서 역사부정과 혐오를 선동하는 주장과 수법이 쉽게 불식되지 않

을 흐름으로 차츰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뉴미디어의 인공지능과 하이퍼링크 기술, 접근성 높은 플랫폼들은 한미일 트랜스내셔널한 네트워킹을 확산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이들의 주장과 논리, 수법을 담론적으로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반일 종족주의’ 현상이든, ‘램지어 사태’든 간에 그 배경과 맥락을 분석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학술적 진실성’ 너머에서 아른거리는 한미일 역사부정과 혐오의 네트워크를 직접 겨냥하지 않고서는 이 현상·사태가 반복적으로 찾아올 것이다.

3. 램지어의 화답과 한미일 탈진실의 순환인용

램지어는 시민단체 활동가와 학생, 페미니스트, 경제학자, 역사 연구자들이 자신의 논문을 비판하는 많은 성명과 탄원서, 논평과 페이지를 보면서, 무엇보다 IRLE에 논문 게재 철회를 촉구하고 IRLE가 ‘Expression of Concern’을 밝히는 사태를 겪으면서, 반일 캠페인에 사로잡힌 미국 좌파 학자들과 한국의 ‘친북’ 또는 민족주의자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심사를 거친 학술논문으로 자신을 비판하지 않고”[Lee, Saito & Todres의 논문(2021) 비판 제외] “자기 논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태로 규정한다. 또한 램지어는 자신을 지지하는, “한국의 용기 있는 학자들이” “너무 자주 활동가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대학에서 조사받고, 정부에 의해 기소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우연 기사가 the Diplomat에서 철회된 사례를 들어 “이 주제와 관련해 미국의 인문학 학자들에 의한 검열” 역시 심각하다고 지적한다.¹³⁾

이런 인식은 램지어가 한국 뉴라이트 성향의 미디어워치TV(유튜브채널)에 보낸 “For Koreans Fighting to Protect Academic Freedom and Free Speech” 제목의 영상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¹⁴⁾ 그는 학문·언론·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싸워준 한국인들, 특히 황의원과 이우연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자기를 비판

13) Ramseyer, 앞의 글, 2022, pp.5-7.

14) Ramseyer, “For Koreans Fighting to Protect Academic Freedom and Free Speech,” The MediaWatch TV 2022.3.13. <https://www.youtube.com/watch?v=Om3WuJhGN2M> (검색일 2022년 5월 17일)

하는 대부분의 미국대학 성원들은 ‘위안부’ 연구와 관련해 과도하게 편협하고 통설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화가 나 자신을 처벌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이런 ‘불관용(intolerance)’ 행태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와는 전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에 맞서 싸우는 위치로 스스로를 위치시킨다. 그러면서 니시오카 쓰토무를 통해 자신을 도와준 한국의 학자들을 알게 되었다며 일일이 이름을 언급하고 감사의 말을 전한다.

그가 호명한 31명의 한국인 가운데 최소한도로 학자라고 할 만한 인사를 꼽자면, 이우연, 김병현, 이영훈, 류석춘, 주익중, 정안기, 죠셉 이(호명순) 7명이다. 『반일 종족주의』 저자 중 한 명을 빼고 여섯 명이 램지어에게 감사의 말을 받은 셈인데, 그 가운데 이우연, 이영훈, 주익중은 “A Response to My Critics”에서도 상당한 비중으로 순환인용되었다. 나머지 23명은 언론인 및 유튜버, 변호사, 뉴라이트 시민단체 대표들이다. 대부분 심각한 역사부정과 혐오 표현으로 한국 언론에 여러 번 그 이름을 올렸던 인사들인데, 램지어에게는 자신을 지지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이라 그 인연이 소중했을 것이다. 그가 이 한국인들에게 “충명하고 용기 있는”, 그리고 “고결한 연구에 전념”하고 심각한 개인적 위협을 감수하고 용기 있게 발언하는 인사들이라고 극찬한 이유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 영상에서조차 거짓을 진실로 탈바꿈시키는 순환인용의 수법과 한미일 역사 부정주의자 네트워크에서 작동하는 ‘램지어 구하기’의 실체를 여지없이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확인한 것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램지어 구하기 이전에도 램지어의 ‘수상한’ 감사 네트워크와 탈진실의 순환인용은 일본의 역사부정주의자들을 중심에 두지 않고 그 전모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이 글에서는 후쿠이 요시타카와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가 매개로 언급되었을 뿐인데, 사실 이들을 포함해 램지어가 항상 감사 인사를 보내는 일본 레이타쿠대 제이슨 모건 교수, 아오야마가쿠인대 기무라 마쓰히코 교수, 도쿄대 미와 요시로 교수 등이 주장과 활동이 조명될 필요가 있다.

제이슨 모건은 일찍부터 일본 역사부정주의자들에 의해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미국인 스피커로 활동해왔다. 그는 대학원생일 때부터 ‘위안부의 진실 국민운동’이라는 일본의 우파 역사부정주의 단체의 지원을 받고 일본 우파 역사전쟁의 홍보 역할을 했다.¹⁵⁾ 그는 2015년 미국의 역사교과서(맥그로힐 출판사 출판)에 일본

15) 야마구치 도모미·노자와 모토카즈·테사 모리스 스텔스키·고야마 에미, 임명수 역, 『바다를 건너간 위안부: 우파

군 ‘위안부’ 문제 서술(허버트 지글러, 하와이대 교수)된 것에 대해 수정을 요구한 아베 내각의 입장을 옹호했고, 센트럴 워싱턴대학에서 ‘위안부’ 부정을 주제로 강의했으며, 위스콘신대학에서 일본 우파의 원로인 히라카와 스케히로(도쿄대 명예교수)와 하타 이쿠히코가 개설한 웹사이트를 선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 학계, 심지어 지도교수와도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⁶⁾ 그 다음해인 2016년에 그는 위스콘신대학에서 현대 일본법 역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2016년부터 반공·반미·혐한·혐중·친일 시각에서 일본 역사부정주의의 입장을 완벽히 ‘빙의’한 책을 출판하기 시작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공산주의를 응징하기 위해 미국과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정의의 편이었다는 범접할 수 없는 색깔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 학계가 좌파 과격분자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고, 객관적이지 못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포스트모더니즘 정서주의와 반지성주의”¹⁷⁾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와 달리 일본 학계는 학문의 자유와 객관성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왜 일본을 무시하는가 반문하며 잘못된 대일역사관을 바로잡는다는 듯, 미국도 중국도 한국도 반성하고 일본을 본받으라는 제목의 우파 서적을 연달아 출간한 것만 봐도, 그의 발화 위치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일본 우파의 싱크탱크인 일본전략연구포럼 선임연구원이기도 하다. 이 단체는 일본의 대표적인 우파 싱크탱크 중 하나로, 전범 출신 우파의 거물인 세지마 류조가 초대 회장을 맡았고, 일본 극우세력이 전면에 포진돼 있다. 일본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는 단체다. 제이슨 모건은 이 단체의 기금을 받아 하타 이쿠히코의 『위안부와 전장의 성』(1999)을 Comfort Women Sex in the Battle Zone(2018)으로 번역 출판했다.

현재 제이슨 모건은 가장 활발하게 ‘램지어 구하기’ 활동에 나서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부정주의 단체인 역사인식문제연구회의 부회장이기도 하다. 현재 이

의 ‘역사전’을 묻는다』 어문학사, 2018, 178쪽.

16) Jason Morgan, 「좌파가 미국 학계의 지적 풍토를 단일화하는 수법: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역사인식문제연구』 제3호, 2018.9.20.

17) 위의 글.

단체의 회장은 니시오카 쓰토무다. 제이슨 모건과 니시오카 쓰토무는 이영훈, 이우연, 미디어워치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램지어 사태’ 직후 발빠르게 램지어 구하기 성명을 내기도 했다.

램지어의 수상한 감사는 제이슨 모건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 둘의 교류는 역사부정주의 네트워크의 한 부분이다. 다시 말해 램지어의 주장, 논리, 방법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한·미·일 역사부정주의의 네트워크의 산물이다. 이 네트워크는 한 마디로 반일을 좌악시한다. 심지어 반일에 대해 공산주의자, 심지어 ‘중북 좌파’라는 색깔을 씌운다. 그리고 일본제국주의의 역사를 미화한다. 이를 성찰하고 단죄하는 역사관에 대해서는 반일 좌파의 ‘자학사관’이라고 공격한다. 램지어는 ‘위안부와 교수들’에서 정대협을 염두에 두고 반일은 중북 좌파라는 생각을 노골적으로 표현한다. 이 네트워크의 인사들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과 성노예제는 중북 좌파 또는 ‘반일종족주의자’의 음모와 주장에 불과하다.

니시오카 쓰토무는 현재 레이타쿠대학 객원교수로,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부정주의 단체인 역사인식문제연구회의 회장이다. 역사인식문제연구회는 일본회의와 친분이 있고 과거 새역모 멤버였던 니시오카 쓰토무, 다카하시 시로 등이 2016년 10월 1일 설립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국내에서는 승리했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아직도 반일세력의 영향력의 강한데, 우리(일본) 정부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반론을 아직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연구, 자료, 수집, 젊은 연구자 육성은 물론 외국어로 홍보하고 정부 및 관계기관에도 제언할 목적으로 설립했다는 조직이다. 단체 기관지인 『역사인식문제연구』는 연 2회 발행하고 있고, 2017년 9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2021년 3월 제8호를 발간했다.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운동을 벌였고, 일본에 ‘반일 종족주의’ 주장과 저자들을 적극 소개하고 있다.¹⁸⁾

그는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특히 이우연은 니시오카의 책(『날조한, 징용공 없는 징용공 문제』)을 번역했다. 이 책은 미디어워치가 ‘세계자유 보수의 총서 1’권으로 출판했는데, 나와 동료 연구자 등 역사부정주의에 비판

18) 강성현, 『탈실의 시대, 역사부정을 묻는다: ‘반일 종족주의’ 현상 비판』, 푸른역사, 2020, 46-47쪽. 2020년 3월 역사인식문제연구 제6호에서 “반일 종족주의의 철저 해부”라는 주제로 총 6개의 논문을 게재, 소개하고 있다.

적인 연구자 및 기자들에게도 뿌려졌을 정도로 출판 기금의 출처에 관심이 간다. 니시오카 쓰토무는 ‘램지어 사태’ 이후 처음으로 램지어 구하기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 그 내용은 램지어 논문 출간에 감사하다는 것과 이영훈 교수의 주장을 소개하는 것이었다. 이후 “위안부 성노예설은 학계의 정설도 아니며, 램지어 논문도 학계에서 한 학설로서 존재 가치가 충분히 있다”¹⁹⁾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단체의 부회장도 거물급 우파 역사부정주의자다. 새역모 부회장 출신인 다카하시 시로(레이타쿠대학 특임교수), 에자키 미치오(평론가), 그리고 제이슨 모건이다.

이 인사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니시오카 쓰토무와 제이슨 모건의 소속 대학이자 일본 역사부정주의의 거점인 레이타쿠대학교(morality 재단) morality 연구소²⁰⁾의 역사연구실(2021년부터 ‘역사연구 프로젝트’ 체제로 변경)의 네트워크와 활동이 주목된다. 흥미로운 건 역사연구실의 연구 활동(역사연구 프로젝트)이 역사인식문제연구소 기관지인 『역사인식문제연구』를 통해 공표된다는 점이다. 역사부정주의 단체인 역사인식문제연구회와 모랄로지 연구소 내 역사연구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설치된 것은 우연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니시오카가 책임자로 있는 역사연구실이 관여한 프로젝트 가운데 일본문명연구포럼이 있었는데, 포럼 대표가 니시오카였고, 임원으로 램지어, 모건, 그리고 조지타운대 동아시아언어문화학과 학과장이자 사사카와재단 석좌 교수인 케빈 도크(Kevin M. Doak) 등이 있었다.²¹⁾ 이 포럼의 활동 내용을 보면, 그 실체가 일본과 미국의 역사부정주의자 네트워크 조직으로 판단된다.

주지하듯, 일본의 관민 일체화된 역사전쟁은 주전장 미국과 유엔무대로 향했고, ‘소녀상’ 설치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교과서 서술을 방해하기 위해 외교 압박과 사법 제소, ‘시민 여론’을 가장한 단체 동원, 역사부정주의 주장의 선전 및 확산에 조직적인 역량을 쏟았을 뿐 아니라 미국 대학과 학계에까지 침투했다. 정부의 공공외교 예산이나 기업의 기부금뿐 아니라 morality 재단과 연구소를 통한 학술 연구와 교육 지원은 역사부정주의의 주장과 수법을 재생산하고 확산시키는데 윤희유 같은 역할

19) 니시오카 쓰토무 “하버대드 위안부 논란, 머릿수로 진리 정할 것인가?”, 미디어워치 2021.3.6

20) 한국 MBC뉴스 보도에 따르면, morality 재단(이사장 히로이케 모토다카)과 사쿠라이 요시코가 이끄는 국가기문제연구소는 돈과 인사의 흐름으로 볼 때 긴밀히 서로 연결되어 있다. 박성호, 「제2, 제3의 램지어가 나올 수 있는 이유」, MBC뉴스 2021.4.11

21) 고일환, 「‘역사왜곡 논문 양산’ 램지어-일 우익단체 점점 확산」, 『연합뉴스』 2021.4.6

을 했다. 미국인이지만 레이타쿠대에서 교수로 발탁된 반미·친일 성향의 제이슨 모건과 하버드대 로스쿨 일본학 교수 램지어 간의 관계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둘이 쓴 Japan Forward 인터뷰 기사나 기고글을 보면, 서로 띄워주고 끌어주면서 역사부정주의 시각을 신념화하고 그 신념에 맞는 자료들을 선별 가공하고 곡해를 강화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 이런 미일 역사부정주의의 네트워크와 ‘램지어 구하기’의 실체에 대한 연구도 본격화되길 기대해본다.

2022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 학술회의

**역사부정의 공공외교:
유럽 내 일본 극우재단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윤석준(성공회대)

역사부정의 공공외교: 유럽내 일본 사사카와 계열 재단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윤석준 (성공회대학교)

- 들어가며 a Happy New Year
- 역사부정의 공공외교
- 유럽내 사사카와 계열 재단들의 공공외교
- 나오며

善川良一
Ryoichi Sasakawa

들어가며

인간재미

프랑스 학자들, 일본극우 재단과 싸운다

FONDATION FRANCO JAPONAISE SASAKAWA

들어가며

- 유럽에서 일본의 과거사 관련 역사부정은 그동안 주로 민간재단들의 학술, 교육, 인적교류 후원 사업들을 기반으로 태동하고 성장해왔다. 이들은 일본 국내에 있는 지주 재단(holding foundation) 및 계열 재단들(affiliated foundations)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유럽에서 일본이나 동아시아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교육, 인적교류 활동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해왔다.
- 이에 대한 규범적 비판을 넘어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응에 나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럽내 일본 재단들이 수행해온 학술, 교육, 인적교류 지원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유럽내 일본 및 동아시아 연구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해온 일본 사사카와 계열 재단들의 활동을 국제정 치학에서의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라는 틀로 분석 및 이해해보고자 한다.



2. 역사부정의 공공외교

2.1. 공공외교의 정의 및 특성 (2)

- 타국의 일반 대중이 자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갖게 하여 타국의 정부가 자국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대내외 정책을 수립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일련의 외교활동을 말한다. 공공외교가 기존의 전통적인 외교와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은 외교의 대상에 있다. 전통적인 외교가 타국의 정부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면, 공공외교는 타국의 정부가 아닌 타국의 대중에 외교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국제관계에서 공공외교는 냉전시기 미소간 경쟁 과정에서 태동 및 발전해왔다. 미국은 공보처의 주도하에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을 주요 대상으로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해왔다. 냉전시기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해오던 공공외교는 탈냉전기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전세계에 확산되기 시작한다. 유럽연합(EU)과 그 27개 회원국들,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은 공공외교를 자국의 핵심 외교 정책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2. 역사부정의 공공외교

2.1. 공공외교의 정의 및 특성 (1)

- 냉전시기 미국은 국제방송과 인적교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우방국 대중에게는 미국에 대한 호의적 인식을 높이고, 적대국 대중이 갖고 있는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줄이고자 노력했는데, 탈냉전 이후 현대 공공외교는 국제방송과 인적교류뿐만 아니라, 언어, 교육, 학술, 스포츠, 문화, 안보, 개발 분야 등으로 공공외교의 영역을 빠르게 확장시켜왔다.
- 또한 공공외교의 주체도 과거에는 정부내에서 외교부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던 것과는 달리 오늘날에는 국방부, 교육부, 문화부 등 다양한 부처들이 공공외교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들도 공공외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정부 행위자를 넘어 기업이나 일반시민과 같은 민간 행위자라도 그 주체가 확장되고 있다.



2. 역사부정의 공공외교

2.2. 학술, 지식, 인적교류 분야의 공공외교 (1)

- 공공외교가 다양한 영역들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이들에 대한 재분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날 지식 공공외교, 문화 공공외교, 정책 공공외교라는 세 가지 분류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 중에서 지식 공공외교는 학술, 교육, 인적교류 분야의 공공외교를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주로 해외에서 자국 관련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는 인력들을 대상으로 수행된다.
- 지식 공공외교는 자국에 대한 인식의 토대를 제공하는 해외의 학술적 및 사회적 담론이 자국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형성되도록 영향을 미치는 데 그 주목적이 있다. 그래서 지식 공공외교는 해외에서 자국에 대한 학술적 담론이 태동하고 성장하는 과정은 물론 이러한 학술적 담론의 담지자인 연구자들의 학위 과정에서부터 중견 연구자로서 성장하는 학문적 생애주기의 전과정을 지원한다.



2. 역사부정의 공공외교

2.2. 학술, 지식, 인적교류 분야의 공공외교 (2)

- 문화 공공외교가 자국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이미지 투사에 초점을 맞춘 투사형 공공외교 (Projection public diplomacy) 성격이 강하고, 정책 공공외교는 그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제도·아이디어 등 정체성을 설파하는 주창형 공공외교(Advocacy public diplomacy) 성격이 강한 특성을 갖고 있는 반면, 지식 공공외교는 투사형 및 주창형 공공외교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지니면서 문화 및 정책 공공외교의 중요한 토대를 제공한다.
- 문화 공공외교와 정책 공공외교가 각각 호의적인 인식과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면, 상대적으로 지식 공공외교는 부정적인 인식 감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해외에서 일반 대중들이 갖고 있는 형성적 사건들(formative events)이 자국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지식 공공외교를 통해 이와 관련된 부정적인 인식을 감소시키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 역사부정의 공공외교

2.3. 민간이 주도하는 역사부정의 공공외교 (2)

- 일반적으로 학술, 교육, 인적교류 분야의 공공외교는 정부행위자와 함께 민간행위자도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민간협력 차원에서 '적극적 공조'의 형태를 띠는 경우도 있고, 동일한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병렬적 활동이 전개되는 '소극적 공조' 형태를 띠는 경우가 있다.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역의 지방정부 공공외교 사례나 중국의 정부 행위자와 싱크탱크가 밀접한 협력 관계를 구성하는 혼종적 형태(hybrid form)의 사례는 적극적 공조의 형태에 속한다.
- 일본의 경우에는 학술, 교육, 인적교류 분야의 공공외교에서 상대적으로 소극적 공조 형태를 보여왔다. 일본 외무성 산하 공공외교 전담기관인 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은 1972년도에 설립되어 그동안 주로 문화 공공외교에 주력한 반면, 사사카와 료이치가 설립한 일본재단(Nippon foundation)은 일본 정부의 국제교류기금보다 10년여 앞선 1962년에 설립되어 학술, 교육, 인적교류 분야의 지식 공공외교 활동에 주력해왔다.



2. 역사부정의 공공외교

2.3. 민간이 주도하는 역사부정의 공공외교 (1)

-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가 되기 위한 노력 차원에서 1960년대부터 공공외교 활동에 주력해왔다. 일본은 자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세계에 전파하기 위한 활동은 물론, 전범국가로서 전쟁범죄라는 역사적 사실로 인해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이러한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한계를 보완해준 것은 일본의 민간 행위자들이었다.
- 일본의 전범기업들과 전범가문들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이들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해외 학술연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해외 여러 나라 대학의 학자어나 학생들에 대한 연구 및 교육 활동 지원에 주력해왔다. 그 동기는 해외에서 기업활동 수행에 있어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막대한 재산을 형성한 전범가문 후손들이 선조의 명예회복을 통해 국내외에서 정상화되고 싶은 의지도 반영되었다.



3. 유럽내 사사카와 계열 재단들의 공공외교 활동

3.1. 사사카와 료이치와 일본의 공공외교 (1)

- 사사카와 료이치(1899~1995)는 1900년대 초반 일본에서 전체주의 운동에 참여하며 극우정당을 창당하기도 했으며,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를 가장 존경한다고 밝혀온 인물이었다. 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에는 A급 전범으로 기소되어 스가모 감옥에서 3년여 기간동안 수감생활을 하였으나, 불명확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어 자유의 몸이 된 후 모터보트경주법 관련 도박사업을 시작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한뒤, 이를 토대로 일본재단(Nippon foundation)을 설립한다.
- 이후 일본재단을 지주 재단(holding foundation)으로 정점에 놓고 여러 개의 계열 재단(affiliated foundations)을 순차적으로 설립하면서 비영리 영역에서 자이바쓰(Zaibatsu)를 연상시키는 재단그룹(foundation group)을 형성하게 된다. 그 결과로 일본재단은 창설 이후 초기 30여년 동안 국내에서 14개의 계열 재단을 설립하고, 1980년대 이후에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10여개 이상의 현지 계열 재단을 설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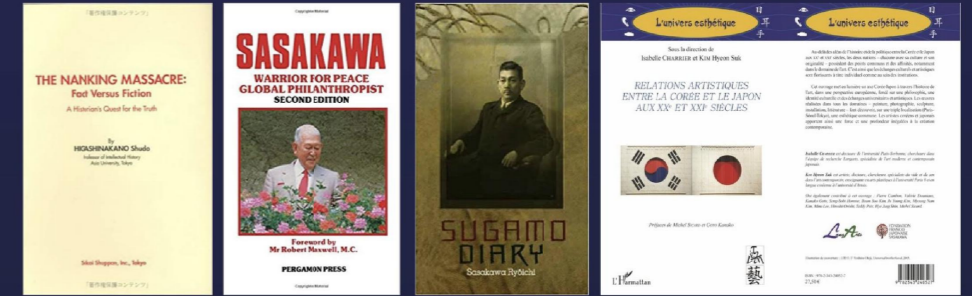
3. 유럽내 사사카와 계열 재단들의 공공외교 활동 3.1. 사사카와 료이치와 일본의 공공외교 (2)

- 사사카와 계열 재단들 중에서 그동안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해온 곳은 사사카와 평화재단 (The Sasakawa Peace Foundation)이다. 1996년 설립된 사사카와 평화재단은 국제평화 증진을 위한 연구, 교육, 인적교류를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재단은 미국과 유럽의 주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국제평화 관련 대학원 과정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대학원생들과 학자들의 연구활동 및 인적교류를 지원한다.
- 일본재단과 사사카와 평화재단은 한국을 대상으로도 학술, 교육, 인적교류 분야에서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해왔다. 일본재단은 1987년 고려대에 사사카와 영리대 장학금을 설치해서 운영해왔고, 1995년 연세대에 200억원 규모의 아시아기금을 설치하여 교내의 수십여명의 교수들의 연구를 지원해왔다. 또한 일본재단은 2010년 유명 한류 연예인과 국내 굴지의 프렌차이즈 업체 회장과 함께 '렛츠 트리(Let's Tree)'라는 환경기금을 공동으로 창설하기도 한다.



3. 유럽내 사사카와 계열 재단들의 공공외교 활동

3.2. 유럽내 사사카와 계열 재단들



3. 유럽내 사사카와 계열 재단들의 공공외교 활동

3.2. 유럽내 사사카와 계열 재단들



결론을 대신하여



memo

memo

memo